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주의요구

제 목 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 복무보고 후 해외여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의 파견근무 규정에 따라 2016년 6급 공무원 3명(농업 1, 시설 1, 사회복지 1)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6급 중견리더과정에 교육파견(2016. 2. 15.부터 2016. 12. 16까지, 10개월)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서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2 및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근무기강 확립)의 규정에서도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학칙」 제7조제6항에 의하면 교육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결강·외출·조퇴·지참·외박 및 교육훈련 일정에 따른 행사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원을 작성하여 학생장과 과정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밀양시 ★★과(현 ○○○과) 지방농업주사 ○○○은 중견리더과정 교육과전 근무기간 중인 2016. 8. 25.(목)부터 8. 30.(화)까지 개인 친목 계모임에서 계획한 동남아(캄보디아, 앙코르왓) 해외여행을 가기 위하여 8. 25.(목)오후 ~ 8. 26.(금) 오전, 1일간을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해외로 출국하였고, 8. 26.(금)오후 ~ 8. 30.(화)오전, 2일간은 가사정리를 사유로 하여 결석원을 작성하여 당시 학생장을 통하여 대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지방농업주사 ○○○의 무단이탈 결석 사실을 확인하고 학칙에 따라 감점 처리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직원 복무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②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0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를 위반한 밀양시 ★★과(현 ○○○과) 지방농업주사 ○○○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겸직허가 등 복무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에서는 기업·투자유치, 경제분야 정책개발을 위한 경제분야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경제분야 전문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2015.2.4.)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및 제21조의3 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공무원인 경제정책자문관을 채용하고 있다.

※ 최초 임용 2015. 3. 19 ~ 2016. 3. 18, 계약 연장 2016. 3. 19 ~ 2018. 6. 30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및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6조에서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밀양시 ★★과에서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¹⁾ 가급인 경제정책자문관 채용계획을 수립(2015.2.4.), 밀양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2015.2.11.) 및 채용 공고(2015.2.12.~2.22.) 후 서류전형에서 2명의 응시자를 합격자로 처리하고, 면접시험에서 1명을 합격자로 나머지 1명을 불합격자로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밀양시 ★★과에서는 당시 면접시험에 최종합격한 1명이 비영리단체인 주한 ○○상공회의소 사무처장으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무담당(검직허가 업무담당)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검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경제분야 전문인력 채용관련 합격자 검직허가 방침결정」 공문(2015. 3. 4.)을 통하여 검직 가능 여부를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각 항의 영리업무 금지는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기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하는 것이라고 법리해석을 하여 ‘합격자가 종사하는 현직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 전념,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우리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어 검직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방침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검직허가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및 협의(복무담당)도 없이 검직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채용계약 하였다.

이후, 2015년 3월 19일 다른 비영리단체에 주당 최소 24시간 이상을 근무조건으로 고용계약 중²⁾인 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급, 경제정책자문관, 주당 20시간, 월·화 전일, 수 오전) 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밀양시 ★★과에서는 신규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인 경제정책자문관이 당시 비영리단체인 주한 ○○상공회의소 사무처장으로 근무 중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및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검직 사전허가 대상임을 임용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복무규정 및 조례에 따른 의무조치를 소홀히 하여 경제정책자문관이 주한 ○○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을 그만 둘 때(2015. 12. 31.)까지 시장의 검직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정하게 검직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사전허가 없이(중복 고용계약) 검직한 기간 : 2015. 3. 19 ~ 2015. 12. 31

1) 채용등급 ‘가’급(경제정책자문관), 근무유형 주20시간 근무(2일 전일, 1일 반일), 연봉 26,278천원(월 2,189천원)

2) 주한 ○○상공회의소와 고용계약서상 주당 최소 24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고용된 자

특히, 밀양시 ★★과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계약서 제9조에서 “복무는 임용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소속·근무부서는 ●●●●과로 지정)지방 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6조³⁾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근무시간은 주 20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을 “월·화 전일근무, 수요일 오전근무”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임용 계약서에 근무지를 ●●●●과로 지정(정부통합전산센터 원격 근무서비스 GVPN 이용, 원격근무지 주한 ○○상공회의소)하고 지방공무원법의 제규정과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경제정책자문관이 지정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근무를 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 원격근무서비스 GVPN을 전혀 이용하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검직허가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과 및 ●●●●과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및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위반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검직허가 등 복무관리를 소홀하게 처리한 ★★과(현 ●●●●과) 실무책임자이며 ●●●●과 감독책임자인 지방행정사무관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3)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56조(영리 및 겸직 금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훈계요구

제 목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 ★★과는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표1>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현황

구분	계	2015. 4.이후	2016년	2017년	비고
제작회수	23회	6회	12회	5회	
제작업체	○○○	○○○	○○○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5. 8. 5.)」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금지를 위해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작일지에는 제작 시·종료시간, 일일 생산량, 봉투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규격봉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밀양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시방서」 제3항에 따르면 제작업체는 종량제 봉투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밀양시에서는 제작업체에 현지 출장하여 입회·확인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봉투를 검수하기 전에는 제작일지를 확인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불법제작·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밀양시 ★★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23회(2015년 6회, 2016년 12회, 2017년 5회)에 걸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면서 제작업체가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불법으로 제작·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과정에 반드시 입회하시고, 제작업체에서 작성한 작업일지 등을 확인 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업무를 소홀히 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지방행정주사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공장등록(등록변경) 업무 부당 처리 및 사후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밀양시(A과, B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A과와 B과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 승인 업무와 설립(설치)이 완료된 공장의 등록 및 공장등록대장의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기준공장면적률 적용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에 따라 제8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제1항에 따르면 기준공장건축면적은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의 계산식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16조(공장의 등록)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에 따라 시장·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등록하여야 하고,

산업집적법 제16조(공장의 등록)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2. 공장부지면적,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만 해당), 4.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5.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 6. 세부업종변경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기준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한하고,

산업집적법 제48조(보고 및 검사)에 따라 시장·군수는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 공장등록대장 정확성 유지

산업집적법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시장·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 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기준공장면적률 미충족 업체의 부당한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처리

「산업집적법」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및 제16조(공장의 등록)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 및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공장등록 처리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준공장면적률 등 관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 적합할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밀양시 A과에서는 2014. 12. 31. (주)aaa의 공장설립 완료신고 사항(2008. 8. 28. 설립 승인)에 대하여 공장건축면적의 적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장건축면적률이 기준공장면적률 15%에 미달하는 14.79%임에도 2015. 1. 2. 등록완료 처리하였고,

2014. 2. 10. ccc의 공장 부분임대에 따른 등록변경 신청에 대하여 기존 공장의 공장건축면적률이 기준공장면적률 15%에 미치는 못하는 10.98%임에도 등록변경 처리하였으며,

2015. 5. 20. (주)ddd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에 대하여도 공장건축면적률이 기준 공장면적률 12%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6.9%임에도 등록변경 처리하였다.

< 기준공장면적률 미충족 업체 공장등록(등록변경) 부당처리 현황 >

(단위 : m²)

구분	처리 일자	공장명	공장소재지	업종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건축 면적률(B/A)	부지면적 (A)	건축면적 (B)
공장 등록	'15.1.2.	(주)aaa	산내면 산내로	골판지 제조업 외 1종	15%	14.79%	18,946.00	2,802.38
등록 변경	'13.2.15.	(주)bbb	부북면 사포 공단2길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외 4종	13.6% (5업종 평균)	12.03%	3,261.00	392.37
	'14.2.10.	ccc	상남면 이연길	주형 및 금형 제조업	15%	10.98%	2,129.00	233.89
	'15.5.20.	(주)ddd	상남면 상남로	1차 유리제품 제조업 외 4종	12%	6.90%	75,326.14	5,244.00

나. 공장부지 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및 제조시설 무단 설치업체 방치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천막 구조로 축조 할 수 있고, 가설건축물에는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다음 현황과 같이 (주)eee 등 2개 업체의 경우 강파이프/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사항과 달리 강파이프/판넬 구조의 허가 대상의 건축물을 축조한 상태이고,

(주)ggg 등 3개 업체는 가설건축물 내 제조시설을 무단 설치하여 조업 중에 있음에도 관리·감독 부서인 밀양시 A과에서는 시정명령 등 적정한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장부지 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및 제조시설 무단설치 업체 현황 >

(단위 : m²)

공장명	공장소재지	업종	부지 면적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위반내용	비고
				건축면적	용도	구조		
(주)eee	교동	금속 문, 창, 셔터 등	2,204	300	창고	강파이프 /천막	천막이 아닌 판넬구조 건축	
(주)fff	하남읍 남전리	판지 상자 및 용기	8,917	1,046	창고	강파이프 /천막	천막이 아닌 판넬구조 건축	
(주)ggg	부북면 무연리	플라스틱 필름	10,007	565	창고	경량철골 /천막	제조시설 무단 설치	
(주)hhh	산외면 남기리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16,457	750	창고	일반철골 /천막	제조시설 무단 설치	
(주)jjj	산외면 다죽리	안전유리	7,175	800	창고	경량철골 /천막	제조시설 무단 설치	

다. 공장등록대장 관리 소홀

시장·군수는 등록된 공장이 폐업되거나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 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밀양시 A과와 B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kkk 등 10개의 등록된 공장이 폐업 또는 사실상 폐업된 상태임에도 등록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있다.

< 공장등록대장 관리 소홀내역 >

(단위 : m²)

공장명	공장소재지	업종	부지 면적	제조 시설	부대 시설	폐업 여부	비고
kkk	부북면 감천리	곡물 도정업	2,910	360	418.08	2008. 9. 24. 사실상 폐업	
(주)mmm	부북면 무연리	장류 제조업	2,092	359.04	311.05	2010. 11. 22. 폐업	2018. 6. 5. 작권 등록취소
(주)nnn	부북면 무연리	암연 및 유사제 품	985	300	173.65	2009. 10. 9. 폐업	2018. 6. 5. 작권 등록취소
ooo	부북면 무연리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985	300	173.65	2005. 6. 30. 폐업	
(주)ppp	부북면 전사포	금속 단조제품	1,016	703.61	-	2011. 3. 25. 폐업	

공장명	공장소재지	업종	부지 면적	제조 시설	부대 시설	폐업 여부	비고
(주)qqq	산외면 남기리	기타 특수목적 용 기계 제조	-	1,700	20	2013. 4. 24. 사실상폐업	
(주)rrr	상남면 연금리	구름베어링 제 조업	2,123	560	294	2015. 12. 31. 폐업	2중 등록
sss	상남면 연금리	곡물 도정업	9,717	1,569.59	3,514.07	10여년 전 사실상 폐업	
(주)ttt	상남면 조음리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65.6	-	2010. 9. 30. 폐업	2018. 6. 5. 직권 등록취소
uuu	상남면 조음리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	420	71.4	2012. 1. 31. 폐업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공장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밀양시 A과 지방행정사무관 최○○와 이○○(현, 상남면), 실무담당자 밀양시 A과 지방행정주사보 전○○과 지방행정주사 김○○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그리고 공장부지 내 불법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거나 가설건축물 내 제조시설을 무단 설치하여 조업 중인 업체와 폐업 또는 사실상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장등록(등록변경)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자진철거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부당 집행

소 관 기 관 밀양시(C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C과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양사밀 도시계획 도로 공사 시행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라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안 되고,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토지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및 물건을 취득할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재지 및 지번, 종류·구조 등의 사항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의한 편입면적과 일치하면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부당 집행현황 >

사업명	소재지	소유자	가설건축물		보상금 지급내역		비고
			허가일자	건축면적	보상면적	보상금액	
삼양사밀 도시계획도로	교동 000 (대지, 234㎡)	김○○	2009. 4. 9.	56.74㎡	72.00㎡	48,780,000원	

밀양시 C과에서는 삼양사밀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행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진행하면서 국토계획법 제64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9. 4. 9. 허가한 위 현황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소유자의 부담으로 자진 철거하도록 명하여야 하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설건축물이 설치되기 전에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였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 수선의 필요성과 소유자가 고령이라는 사유로 2016. 2. 12. 보상계획 공고 후 2016. 3. 25. 이에 대한 보상금 48,780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보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밀양시 도시과 실무책임자 지방행정주사 유○○와 실무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김○○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그리고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보상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내수면 신고어업 민원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D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D과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에서 면허 또는 허가를 요하는 어업이 아닌 신고 어업에 대한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민원인 박○○은 2017. 5. 22. 밀양시에 밀양시 상동면 고정·옥산리 밀양강 최상류 지점에서 같은 면 금산리 빈지소 사이 밀양강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투망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에 대한 내수면어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밀양시 D과에서는 2017. 5. 25. □□지방국토관리청에 내수면 수면 이용 협의를 요청하였고, 2017. 6. 9. 및 6. 12.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은 회신내용에 근거하여 2017. 6. 14. 민원인 박○○에게 내수면 어업신고 불수리 처분하였다.

이후 민원인 박○○은 밀양시가 ‘내수면 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내수면어업법」을 근거로 ‘내수면 어업신고 수리의무를 이행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7. 9. 28.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재결을 받았고,

밀양시 D과에서는 민원인 박○○에게 2017. 11. 3. 내수면 어업신고 수리신고 증명서를 최종 교부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신고어업)에 따르면 내수면에서 면허 또는 허가를 요하는 어업이 아닌 투망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등의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그리고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으며,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밀양시 D과에서는 민원인 박○○으로부터 3종(투망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의 내수면어업신고서를 2017. 5. 22.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적법하게 처리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2조에 따라 □□ 지방국토관리청과의 밀양강(국가하천) 내 수면 이용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연장사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민원처리 내부시스템에 ‘구비서류미비에 따른 보완보정사유’로 민원처리 기간을 임의로 12일 연장한 후 내부검토를 거쳐 2017. 6. 14. 불수리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로 신고수리업무 처리 지연과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4항의 처리기한 5일 경과 시 신고수리 간주규정에 따라 밀양시의 ‘내수면 어업 신고 불수리처분은 위법하고 내수면어업 신고 수리를 이행하라’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받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내수면 신고어업 민원업무를 무사안일하게 처리한 밀양시 D과 실무담당자 지방농업주사 최○○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그리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수면 신고어업 민원업무 처리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주의요구

제 목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등) 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 업무를 담당 하면서, 2015 ~ 2018년 기간중에 총 50건의 공장설립(창업) 승인하였다.

2018년 종합감사 이전 기간인 2008. 11. 20. 밀양시 △△면 △△리 00번지 일원 에 ▲▲산업 1·2공장(대표 김○○)에 대하여 최초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신설 승인 하였으며, ▲▲산업 1공장은 2015. 6. 3. ▲▲중공업(주)(대표 정○○)으로 사업주체 를 변경하는 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으며, ▲▲산업 2공장은 2012. 12. 12. (주)▲▲(대표 김○○)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공장설립등 변경 승인하였다.

또한, 2015. 6. 3. ▲▲공업(주)(대표 정○○)에게 최종 공정설립등 변경 승인 하였고, 2015. 8. 28. ▲▲공업(주) 1·2공장의 공장부지면적 변경 등의 사유로 창업 사업계획 및 공장설립등 변경 승인(공장면적 25,276㎡ → 32,354㎡, 증 7,078㎡) 하였으며, 2017. 9. 4. 공장등록완료 신고수리하였다.

【 ▲▲중공업(주) 1·2공장 승인 현황 】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공장·용지 면적(㎡)	건축면적(㎡)	비고
1	▲▲산업 1공장	김○○	△△면 △△리 00 외 8필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12,298	3,984 (제조시설 2,692, 부대시설 1,292)	‘08.11.20. (창업)
	▲▲중공업(주) 1공장	정○○	△△면 △△리 00 외 8필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12,298 → 15,990	3,504 (제조시설 3,330, 부대시설 174)	‘15.06.03
2	▲▲산업 2공장	김○○	△△면 △△리 00 외 8필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12,931	5,677.8 (제조시설 2,010, 부대시설 3,677.8)	‘08.11.20. (공장)
	(주)▲▲	김○○	△△면 △△리	그 외 기타 분류안된	12,931	3,275	‘12.12.12.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공장·용지 면적(㎡)	건축면적(㎡)	비고
			00 외 8필지	화학제품제조업(20499)		(제조시설 2,450, 부대시설 825)	
	▲▲중공업(주) 2공장	정○○○	△△면 △△리 00 외 1필지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3)	12,931 → 14,983	3,976.88 (제조시설 3,321.68, 부대시설 655.2)	‘15.06.03.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부동산개발업법 등록 관계 법령(업무처리 기준)

舊「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시행 2007. 11. 18.)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 부동산개발⁴⁾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요건⁵⁾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금지행위)에서 부동산개발업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6조(벌칙)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한 자, 제20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국토교통부)에서 허가권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및 개발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등록사실을 확인하고, 인허가 면적기준으로 등록대상에 해당됨에도 인허가 신청자가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후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인허가와 동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및 인허가 신청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에서 **“부동산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5)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가.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사무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2인 이상)을 확보**할 것.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으로 신고하여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규모(건축연면적 2,000㎡, 토지면적이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인허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을 확인한 후 “공급 외 목적(직접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후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인허가와 동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동산 개발을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관계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업을 인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인허가 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시행령 제52조(권한의 위임)에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의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허가 내용을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개발행위 규모 및 진입도로 관계 법령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및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호마목에서 기반시설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서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도로)에서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이상, 5천㎡ 이상 3만㎡미만은 6m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라 함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의미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괄호규정에 따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고,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시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주 간선도로(법정도로)에서부터 허가지까지 진입도로 적정폭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농림지역에서 30,000㎡를 초과하여 개발행위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부동산개발업법 미등록업체 변경 승인 등 부적정

밀양시 △△면 △△리 00번지 일원 ▲▲산업 1공장[건축면적(제조+부대) 3,984㎡, 토지 개발면적(공장용지면적) 12,298㎡], ▲▲산업 2공장[건축면적(제조+부대) 5,677.8㎡, 토지 개발면적(공장용지면적) 12,931㎡]의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등) 승인건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후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인허가 변경한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밀양시 ○○과에서는 2015. 6. 3. ▲▲산업 1공장에서 ▲▲중공업(주) 1공장으로, 2012. 12. 12. ▲▲산업 2공장에서 (주)▲▲로, 2015. 6. 3. (주)▲▲에서 ▲▲중공업(주) 2공장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인허가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등) 변경 승인하여, 부동산 개발업 비등록업체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하여 공급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2015. 6. 3. 밀양시 △△면 △△리 00번지 일원의 ▲▲산업 1공장, (주)▲▲에서 ▲▲중공업(주) 1·2공장으로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등) 변경 승인 시 사업계획(공장용지) 면적이 29,771㎡에서, 2015. 8. 28. ▲▲중공업(주) 1·2공장의 사업계획(공장부지) 면적을 32,354㎡로 변경 승인하였고, 이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초과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이며, 개발면적이 30,000㎡를 초과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2015. 8. 28.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등) 변경 승인 후 20일 이내에 인허가 내용을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밀양시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중공업(주) 1·2공장의 창업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후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000천원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 ▲▲중공업(주) 1·2공장 변경 현황 】

구 분	▲▲중공업 1공장		▲▲중공업 2공장	
일 자 (면 적)	내 용	비고	내 용	비고
2008.11.17 (25,276㎡)	▲▲산업 1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12,298㎡)		▲▲산업 2공장 공장설립등 승인(12,978㎡)	
2012.12.11			변경허가 ▲▲2공장 → (주)▲▲	
2015.06.03 (29,771㎡)	변경허가 ▲▲산업 → ▲▲중공업 면적: 12,298㎡ → 15,059㎡	증2,761	변경허가 (주)▲▲ → ▲▲중공업 면적: 12,978㎡ → 14,712㎡	증1,734
2015.08.28 (32,354㎡)	변경허가 면적: 15,059㎡ → 17,377㎡	증2,318	변경허가 면적: 14,712㎡ → 14,977㎡	증265
2016.04.14 (32,354㎡)	변경허가 -면적: 17,377㎡ → 17,371㎡	감6	변경허가 면적: 14,977㎡ → 14,983㎡	증6
2016.05.11 (32,354㎡)	개발행위준공(17,371㎡)		개발행위준공(14,983㎡)	
2016.06.10	공장부분 등록(15,990㎡)		2016.06.20 공장등록 완료신고	
2017.05.11.	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면적증가)		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면적증가)	
	2017.09.04 공장등록 완료신고		2017.08.02 공장등록(증설) 완료신고	

다. 개발행위허가(진입도로 미확보 및 규모 제한 초과) 부적정

2015. 6. 3. ▲▲중공업(주) 1·2공장의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등) 변경 승인 시 ▲▲산업(주), (주)▲▲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업체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인허가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초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등 승인사항에 대한 취소 후 신규 승인하여야 함), 2015. 8. 28. ▲▲중공업(주) 1·2공장의 사업계획(공장용지) 변경 면적이 32,083㎡로 「국토계획법」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진입도로의 폭은 8m 이상으로서 적정폭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없이 기존 농로(B=5.0m)를 활용하여 진입하는 것으로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등) 변경 승인하였다.

또한, 2015. 8. 28. ▲▲중공업(주) 1·2공장의 사업계획(공장용지) 변경 면적이 29,771㎡에서 32,354㎡로 증가함에 따른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등) 변경 승인 시 「국토계획법」 및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가 30,000㎡를 초과하므로, 개발행위 규모제한을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1-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따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반려처분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없이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 행위 규모를 초과하는 공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중공업(주) 1·2공장 진입도로 현황 】



징계요구 양정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 등) 변경 승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적정폭,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 행위 규모 제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위반하여 이를 허가(협의)한 ○○과(現 ○○과) 실무담당자 지방☆☆☆☆ 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2012. 12. 12., 2015. 6. 3. 두 차례에 걸쳐 밀양시 △△면 △△리 00번지 일원에 부동산개발업 등록하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한 ▲▲산업 1·2공장, (주)▲▲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중공업(주))에게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등) 변경 승인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000천원을 부과·징수토록 도지사에게 “통보”하시기 바라며,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일부 시정))

② 이 건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 등) 변경 승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적정폭,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위반하여 이를 허가(협의)한 ○○과(現 ○○과) 실무담당자 지방☆☆☆☆ 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과의 개발행위 허가(협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협의 요청에 대한 결재과정에서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검토하였다면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적정폭,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허가과 실무책임자 지방☆☆☆☆ 황○○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건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등)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업체에 대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인허가 변경을 승인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現 ○○과) 실무담당자 지방☆☆☆☆ 전○○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 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비도시지역내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 2018년 기간중에 2,246건의 토지분할 허가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및 시행령 제65조(분할신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제140조(벌칙)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라목에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등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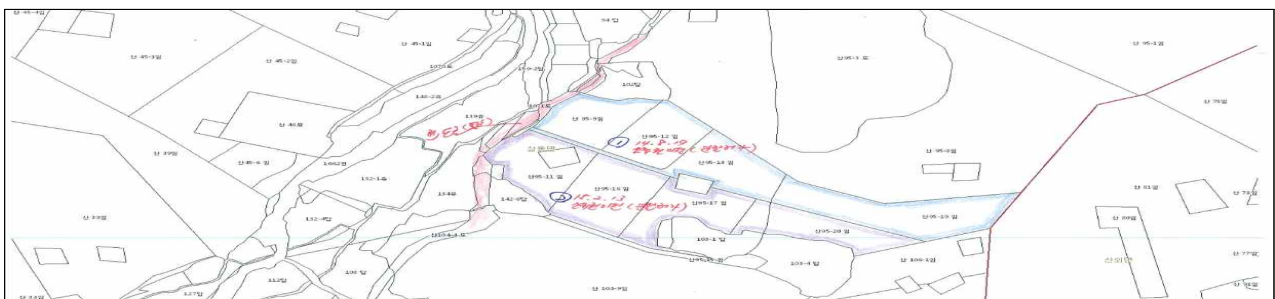
또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에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은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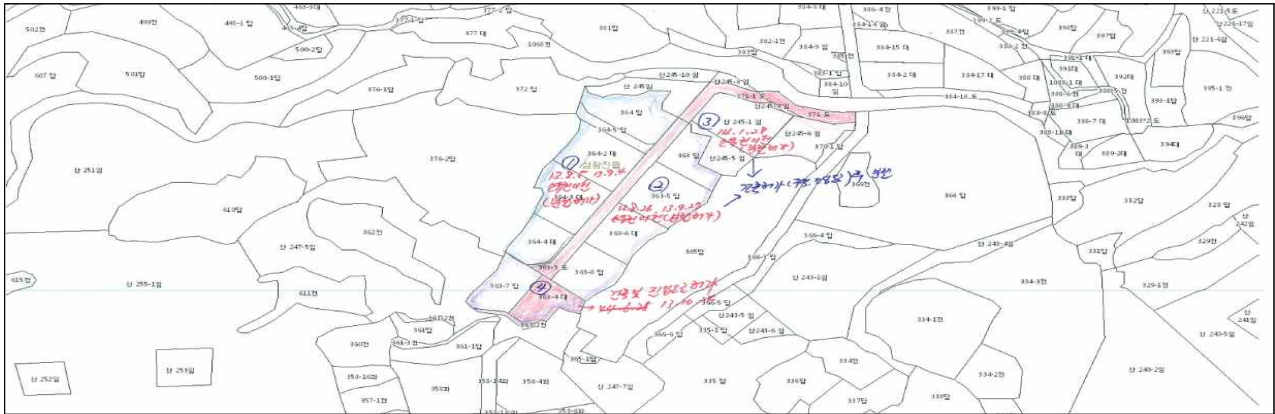
밀양시 ○○과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면 △△리 00번지 외 1필지를 2014. 8. 19.과 2015. 2. 13. 두 차례에 걸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분할허가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아래와 같이 “택지식 형태의 분할”을 허가하였고,

【△△면 △△리 00번지 인근 토지분할 지적 현황】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이 계획관지역인 △△면 △△리 00번지 인근을 2013. 8. 5., 2013. 8. 26., 2013. 9. 4., 2013. 9. 27. 네 차례에 걸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분할허가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아래와 같이 “택지식 형태의 분할”을 허가하였다.

【△△면 △△리 00번지 인근 토지분할 지적 현황】



2006. 3. 21.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기 및 분양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위반하여 “택지식 형태의 분할”한 토지가 각각 분할되어 있는 별개의 토지에 개별건으로 건축신고하여 법령상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절차 등을 회피하고 개별적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비도시지역내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형태의 분할”을 허가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 실무담당자 지방☆☆☆☆ 박○○, ○○과(現 ○○과) 실무담당자 지방☆☆☆☆ 정○○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택지식 형태”로 잘못 허가하는 등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이 건과 같이 개발행위(토지분할)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허가기준의 적합성을 종합 검토 후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예시 : ○○과의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과 이관) 과 법령 위반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건축·환경·개발행위 허가 시 연접지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개발행위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예시 : 관리대장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 등 사후관리(준공인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172개소의 농어촌민박에 대하여 신고 수리하고, 5개소의 관광농원을 준공인가한 후 사후관리하고 있다.

2016. 3. 23. △△면 △△리 00번지 외 6필지 ■■■관광농원에 대하여 준공인가 하였으며, 2016. 7. 7. 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최종 변경승인하였다.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현황】

관광농원명	신청인		사업장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주소	성명			
■■■관광농원	밀양시 △△길 00-0	이○○○	△△면 △△리 00번지 외 6필지	7,450㎡ (영농체험시설 2,500㎡ 포함)	2016. 7. ~ 2016. 12. 31.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불법 농지전용 관계 법령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42조(원상회복 등), 제57조(벌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등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어촌민박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및 제88조(지도·감독 등)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V.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 II 2017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2. 사업내용에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이며,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대장 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의 역할 2.이행점검단계 나. 사후관리에서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 민박의 규모, 위생·소방 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제20조(벌칙)에서 공중위생영업(숙박업⁶⁾,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108조(벌칙), 제1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180조(이행강제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축주등에게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제2호에서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관광농원 캠핑장 준공인가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및 시행령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서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말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은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자율시설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⁷⁾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74조(벌칙) 및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개발면적이 7,500㎡을 초과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기타시설 :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농어촌민박 연접지역 불법 시설물(족구장, 주차장, 수영장 등) 설치 및 운영 부적정

2018년 밀양시 종합감사기간 중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밀양시 ○○과에서는 아래 【농어촌민박 연접지역 불법 시설물(족구장, 주차장, 수영장 등) 설치 및 운영 부적정 현황】 과 같이 2015. 11. 19. 농어촌민박으로 신고수리한 △△면 △△리 00번지 ■■■펜션(사업자 강○○○)을 운영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주차장 및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8개소 9,515㎡ 농지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원상회복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농어촌민박 연접지역 불법 시설물(족구장, 주차장, 수영장 등) 설치 및 운영 부적정 현황】

연번	민박명 (사업자)	주소	불법 시설물 운영 내용			현황
			불법 지번	면적(㎡)	내용	
	합계	8건		9,515		
1	■■■펜션 (강○○○)	△△면 △△리 00번지	△△면 △△리 00 (농지)	852	정원 및 주차장 등 사용	
			△△면 △△리 00 (농지)	400		
2	■■■식당 (민○○○)	△△면 △△리 00번지	△△면 △△리 00	328	펜션부지 사용(족구 장 등)	
			△△면 △△리 00	214		
3	■■■펜션 (이○○○)	△△면 △△리 00번지	△△면 △△리 00	782	펜션부지 로 사용 (족구장 등)	
			△△면 △△리 00	130		
			△△면 △△리 00	443		

연번	민박명 (사업자)	주소	불법 시설물 운영 내용			현황
			지번	면적(m ²)	내용	
4	■■■ (양○○○)	△△면 △△리 00번지	△△면 △△리 00	327	펜션 부지 사용(수영 장, 화장 실, 쉼터)	
			△△면 △△리 00	106		
5	■■■ 관광농원 (이○○○)	△△면 △△리 00번지 외 6필지	△△면 △△리 00	799	야영장 부지 이용	
			△△면 △△리 00	1,500		
			△△면 △△리 00	1,000		
6	■■■(펜션) (백○○○)	△△면 △△리 00번지	△△면 △△리 00	631	족구장 및 야영장 부지이용	
			△△면 △△리 00	632		
7	밀양■■■ (김○○○) 밀양■■■ (이○○○) [■■■빌라]	△△면 △△리 00, 00	△△면 △△리 00	230	주차장 이용	
8	■■■ (김○○○)	△△면 △△리 00번지	△△면 △△리 00	653	펜션 부지 이용(수영 장, 쉼터 등)	
			△△면 △△리 00	488		

나. 농어촌민박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아래 표 【농어촌민박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현황】과 같이 2018. 2. 8. △△면 △△리 00번지 ■■■식당(사업자 민○○)로 농어촌민박 신고 후 연접한 00-0, 00번지의 다가구 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 3. 9. △△면 △△리 00번지 ■■■(사업자 김○○)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후 00번지의 단독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현황】

		
민박명 및 주소	① 밀양시 △△면 △△리 00번지 ■■■(사업자 민○○)	내 용
		② 00-0번지, ③ 00번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무단 용도변경하여 숙박시설 운영

			
민박명 및 주소	① 밀양시 △△면 △△리 00번지 ■■■(사업자 민○○○)	내 용	② 00번지 단독주택 무단 용도변경하여 숙박시설 운영

또한, 2016. 1. 18. 농어촌민박 신고수리한 △△면 △△리 00번지 밀양■■■(대표 김○○○), 2016. 1. 18. 농어촌민박 신고수리한 △△면 △△리 00번지 밀양■■■(대표 이○○○)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라는 명칭으로 한 사업장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다.(※ 김○○○, 이○○○ 부부관계)

【농어촌민박 불법 운영 현황】

			
민박명 및 주소	① 밀양시 △△면 △△리 00번지 밀양 ■■■(대표 김○○○) ② 밀양시 △△면 △△리 00번지 밀양 ■■■L(대표 이○○○)	내 용	신고 명칭과 달리 “▽▽▽▽”라는 명칭 사용 홈페이지 한 사업장으로 운영

그런데도 밀양시 ○○과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운영개선명령,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을 취하지 않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다. ■■■관광농원 캠핑장 준공인가 및 지도점검 부적정

2015. 5. 13.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시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 계획한 원두막 5동(1동 66.6㎡, 1동 19.32㎡, 3동 각14.84㎡)에 대하여, 2016. 7. 7.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 주택(원두막) 5동(1동 66.6㎡, 1동 19.32㎡, 3동 각14.84㎡)으로 “주택(민박)을 이용하고 가족단위 휴식공간 제공 목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의 주택(원두막)의 경우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이며, 2개동(부속 1개동을 포함하여 2개동)을 초과하는 시설로써 이를 농어촌민박으로 신고수리 불가함을 회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변경 승인하였다.

2018년 종합감사 중 관광농원 기본시설인 영농체험시설(매실, 단감 재배)로 인가 받은 시설을 현장 확인한 결과, 관광농원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영농체험시설을 불법 농지전용하여 캠핑장(△△면 △△리 00번지, 쇠석골재 포설 1,500㎡)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연접한 △△면 △△리 00번지(1,000㎡), 00-0번지(1,000㎡)를 불법 농지전용하여 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인 매화관광농원 캠핑장의 당초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4,950㎡, 불법 농지전용한 개발면적이 3,500㎡로 총 8,450㎡로 개발사업면적이 7,500㎡ 초과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관광농원 및 불법 농지전용(캠핑장) 현황】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관광농원 준공인가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원두막)에 대한 농어촌민박 신고수리가 불가함에도 관광농업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성실히 점검하였다면 농어촌민박 연접 농지에 불법 시설물(죽구장, 수영장, 주차장 등)을 설치·운영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농업기술센터 ○○과(現 ○○과) 실무담당자 지방☆☆☆☆이○○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과 관광농원을 반기 1회 이상 성실히 점검하였다면 관광농원에서 반드시 설치하여야하는 영농체험시설과 연접한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농어촌민박에 대하여도 성실히 점검하였다면 연접한 농지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운영중이거나 미신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농업기술센터 ○○과(現 ○○면) 실무담당자 지방☆☆☆☆ 배○○, 농업기술센터 ○○과 실무담당자

지방☆☆☆☆ 이○○○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농지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 시설물(족구장, 수영장, 주차장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하여 운영중인 농어촌 민박 및 관광농원에 대하여는 “**운영개선명령**”,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수사과, 환경평가과)에 위반사항 “**통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광농원사업 신청 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승인하시고,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주의요구

제 목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협의)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건축허가 등 신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등의 허가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2018년 기간 동안 957건의 건축허가, 3,265건의 건축신고, 39건의 다세대주택 허가, 110건의 다가구주택 허가 등 총 4,371건의 건축허가·신고 신청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협의)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및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다음 제3호나목에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고,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제1호 마목에서 기반시설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고,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이상, 5천㎡ 이상 3만㎡미만은 6m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폭을 확보하여야 하고, (3)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지침 3-2-5(기반시설) 제(1)호에서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라 함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의미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괄호규정에 따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고,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시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러 필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신청건에 대해서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⁸⁾를 회피할 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발행위허가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의 성격, 토지소유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으로서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밀양시 ○○과에서는 △△면 △△리 00번지 조○○가 서로 접한 필지에 신청한 2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규모가 1,953㎡로 관련규정에 따라 진입도로의 최소 폭 4.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없이 현황도로(폭 3.0m미만)를 활용하여 진입하는 것으로 허가하는 등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협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별첨】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협의) 부적정 현황의 【표2. 이○○ 허가지(농지전용) 택지 및 진입도로 현황】 ~ 【표24. 백○○ 허가지(산지전용) 택지 및 진입도로 현황】 23건의 개발행위 허가(협의)도 동일한 유형)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협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밀양시 △△면 △△리 00번지 조○○가 서로 접한 필지에 신청한 건축허가건 등 총 24개소 중 11개소의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적정 폭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과 실무담당자 지방☆☆☆☆ 김○○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읍 △△리 00번지 정○○이 서로 접한 필지에 신청한 건축허가건 등 나머지 13개소 중 각각 4~3개소의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적정 폭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現 ○○과) 실무담당자 지방☆☆☆☆ 석○○, ○○과(現 ○○과) 실무담당자 지방☆☆☆☆ 이○○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허가(협의) 건에 대한 결재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처리한 ○○과(現 ○○과) 실무책임자 지방☆☆☆☆ 황○○, ○○과(現 ○○과) 실무책임자 지방☆☆☆☆ 조○○, ○○과 실무책임자 지방☆☆☆☆ 이○○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훈계)

② 향후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택지식, 바둑판식 형태 등으로 분할하여 건축주를 달리하거나 시차를 두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하나의 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예시,

관리대장, 관리카드 등)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1-7(허가처분 및 통지) 및 3-3-2(계획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신청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전체를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한 후 기반시설(진입도로 최소폭 이상)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불법 농지전용지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불법 농지전용지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원상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5~2018년 기간 동안 총 56건의 농지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하였다.

또한, 2018년 종합감사 기간 중 불법 농지전용이 의심되는 58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42조(원상회복 등), 제57조(벌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시장·군수 등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불법 농지전용지(「농지법」 위반) 행정처분 부적정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 농지전용지(「농지법」 위반)의 경우에는 무단 형질변경 면적 등 위법내용을 확인한 후 「농지법」에 따라 고발,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면 원상복구 내용이 무단형질 변경 이전의 상태로 적정하게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밀양시 ○○과에서는 2015~2018년 기간 동안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사법처리(고발)한 총 56건에 대하여 2018년 종합감사 기간에 농지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면 △△리 00번지 김○○ 등 22건의 약 13,596㎡ 무단형질 변경건에 대하여 고발조치 후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 농지전용지(농지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불법 농지전용지(농지법 위반)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적	위반 내용				고발일자	판결결과	행정처 분 내 용	비고
			행위자	훼손면적	행위시점	훼손목적				
소계		25,981	(22명)	13,596				벌금 등		
1	△△면 △△리 00	1,442	김○○	1,100	2015.2.	가설건축물 설치	2015.3.19.	공소권없음	미조치	
2	△△면 △△리 00	838	곽○○	137	2013.12.	주택 및 창고 건립	2016.6.17.	벌금100만원	미조치	
3	△△면 △△리 00-0, 00-0	892	박○○	471	2009년 이전	주택 건립	2015.6.25.	공소권없음	미조치	
4	△△면 △△리 00-0	433	장○○	433	2012년	화장실, 쉼터 등	2015.10.20.	벌금200만원	미조치	
5	△△면 △△리 00	5,200	이○○	5,200	2015.10.	가설건축물 및 부지조성	2015.11.24.	불구속구공판 (징역6월 집행 유예2년)	미조치	
6	△△면 △△리 00 외 4필지	1,067	이○○	1,067	2014년	가설건축물 및 주차장사 용	2016.7.20.	징역1년2월, 벌금100만원	미조치	
7	밀양시 △△동 00-0	203	이○○	203	2013년	가설 주택	2016.7.22	혐의 없음	미조치	
8	△△면 △△리 00-0	88	박○○	88	2015년	농산물판매장 설치	2016.7.22.	공소권없음	미조치	
9	△△읍 △△리 00-0	3,813	대○○ (대표 하○○)	166	2015년	가설컨테이너 및 창고 등	2016.8.11.	불구속구공판 (징역6월, 집행 유예 2년)	미조치	
10	△△면 △△리 00-0	661	김○○	40	2016년	컨테이너 및 창고	2016.8.12.	벌금 100만원	미조치	
11	△△면 △△리 00	179	정○○	179	2016년	평상대여	2016.8.16.	혐의없음	미조치	

연번	소재지	지적	위반 내용				고발일자	판결결과	행정처 분 내 용	비고
			행위자	훼손면적	행위시점	훼손목적				
12	△△면 △△리 00-0, 0	81	이○○	81	2016년	평상대여	2016.8.16.	벌금300만원	미조치	
13	△△면 △△리 00	922	이○○	650	2016년	평상대여 및 식당	2016.8.16.	공소권없음	미조치	
14	△△면 △△리 00-0, 00-0	706	고○○	706	2014년	족구장 및 주 차장	2016.8.16	불구속구공판 (징역8월, 집행 유예 2년)	미조치	
15	△△면 △△리 00	1,064	나○○	100	2014년	가설건축물	2016.8.16	불구속구공판 (징역2월, 집행 유예2년)	미조치	
16	△△면 △△리 00 외 3필지	1,355	이○○	1,355	2014년이 전	야영장부지	2016.8.16	징역 1년 2월 벌금 100만원	미조치	
17	△△면 △△리 00	129	손○○	129	2015년	가설건축물	2016.8.16	벌금400만원	미조치	
18	△△동 00	1,240	정○○	30	2016년	농막(30㎡)	2016.7.17.	벌금100만원	미조치	
19	△△면 △△리 00, 00	1,491	김○○	623	2009년이 전	사찰이용	2016.10.7.	공소권없음	미조치	
20	△△면 △△리 00	1,134	최○○	215	2017.3.	진입도로 쇠 석 깔기	2017.4.4.	벌금300만원	미조치	
21	△△면 △△리 00-0, 00-0	203	곽○○	203	2009년	제실담당 및 대문	2017.7.6.	벌금400만원	미조치	
22	△△면 △△리 00-0	2,840	정○○	420	2017년	산업건설기계 무단 적치	2017.7.21.	벌금 300만원	미조치	

나. 불법 농지전용지 지도·단속 업무처리 소홀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농지전용지(농지훼손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8년 밀양시 종합감사 기간 중 불법 농지전용이 의심되는 58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밀양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읍 △△리 00번지 등 20개소 약 12,102㎡의 불법 농지전용지(농지훼손지)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지 않는 등 불법 농지전용지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불법 농지전용지 지도·단속 업무처리 소홀 현황】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적	불법행위내용				용도지역	비고
			행위자	훼손면적	행위시점	훼손목적		
합 계		61,776	(20명)	12,102				
1	△△읍 △△리 00-0	2,875	이○○	2,100	2017.12.01.	컨테이너,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일반주거 지역	
2	△△읍 △△리 00-0	1,035	송○○	100	2015.03.15.	컨테이너 설치	보전관리 지역	

연번	소재지	지적	불법행위내용				용도지역	비고
			행위자	훼손면적	행위시점	훼손목적		
3	△△읍 △△리 00-0	522	송○○	80	2015.03.15.	컨테이너 설치	보전관리 지역	
4	△△읍 △△리 00-0	523	김○○	34	2016.01.01.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보전관리 지역	
5	△△읍 △△리 00	3,788	민○○	423	2018.05.15.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보전관리 지역	
6	△△읍 △△리 00-0	1,068	오○○	1,068	2015.01.01.	주차장으로 사용	보전관리 지역	
7	△△읍 △△리 00	258	오○○	106	2018.01.01.	주차장으로 사용	보전관리 지역	
8	△△면 △△리 00-0	13,413	이○○	120	2016.07.15.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생산관리 지역	
9	△△면 △△리 00-0	17,016	석○○	2000	2015.11.01.	농지절토,	생산관리 지역	
10	△△면 △△리 00-0	1,179	오○○	1,179	2017.11.15.	불법 농지 성토	생산관리 지역	
11	△△면 △△리 00-0	1,765	정○○	762	2017.11.15.	불법 농지성토	생산관리 지역	
12	△△면 △△리 00	496	양○○	496	2016.01.01.	주차장으로 사용	농림지역	
13	△△면 △△리 00-0	859	손○○	168	2016.12.15.	족구장으로 사용	농림지역	
14	△△면 △△리 00	2,536	권○○	1,566	2017.12.15.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및 불법 절토,성토	보전관리 지역	
15	△△면 △△리 00-0	1,468	강○○	878	2015.05.15.	주차장으로 사용	생산관리 지역	
16	△△면 △△리 00-0	1,104	정○○ 외 1	182	2016.1.15.	진입도로로 사용	생산관리 지역	
17	△△면 △△리 00-0	7,059	진○○	150	2016.12.15.	불법공작물 적치	계획관리 지역	
18	△△면 △△리 00	2,202	유○○	570	2015.04.15.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계획관리 지역	
19	△△면 △△리 00	1,620	김○○	70	2015.06.20.	건설자재야적장으로 사용	보전관리 지역	
20	△△면 △△리 00	990	조○○	50	2017.04.	가설건축물 2동	생산관리 지역	

조치할 사항

① 밀양시장은 2015. 3. 19. △△면 △△리 00번지 등 22개소, 훼손면적 13,596㎡의 불법 농지전용지(「농지법」 위반)에 대하여 사법처리 후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과(現 ○○과) 실무담당자 지방☆☆☆☆ 황○○, ○○과(現 ○○과) 실무담당자 지방☆☆☆☆ 이○○, ○○과 실무담당자 지방☆☆☆☆ 도○○, ○○과 실무담당자 지방☆☆☆☆ 김○○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2015.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법」 위반에 따라 사법처리한 밀양시 △△면 △△리 00번지 등 22개소, 무단훼손면적 13,596㎡의 무단형질 변경건과 2018년 종합 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불법 농지전용지(훼손지) △△읍 △△리 00번지 등 20개소, 무단훼손면적 12,102㎡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사법 처리 및 행정처분(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 등)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 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포상금 등 예산편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실)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실)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예산관계법령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비목(303-01목)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나 2015년~2018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포상금 예산 총 〇〇건 〇〇〇천원을 편성하여 이 중 총 〇〇〇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법령 및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가능하나 2015년~2018년 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민간위탁금 예산 총 〇〇건 〇〇〇천원을 편성하여 〇〇〇천 원을 집행하였다.

2. 포상금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6조제2항 [별표12]에는 포상금 비목(303-01)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상금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편성 및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밀양시 @@@@@@실에서는 2015년~2018년 까지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총 ◆건 〇〇〇천 원의 부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이 포상금 총 〇〇〇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3.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제10조에는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밀양시 @@@@@@실에서는 2015년~2018년 밀양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법령 및 조례도 없이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법령·조례의 근거 없이 편성된 민간위탁 예산을 집행하면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위탁계약 절차 등 관련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민간위탁 부실을 초래하는 등 예산편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법령·조례에 근거 없는 포상금 및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등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실 실무책임자 행정 ○급 ㉠㉠㉠, @@@@실 실무담당자 행정○급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팀 물품구입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외1)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과)에서는 ■■■■■ 팀을 운영하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 ●● 등 장비(물품)를 구입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가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해야 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밀양시 @@@@과에서는 2015~2018년 시청 ■■■■■ 팀 운영을 위한 물품(○○○, ●● 등)을 구입하면서, 연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물품으로 해당년도에 사용할 총 추정물량이 예측가능함도 통합발주(일괄구매) 하지 아니하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사업시행품의를 작성,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

밀양시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매년 동일하게 분할 발주하여 계약 의뢰된 ■■■■■ 팀 물품구입 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당하다면 이를 통합발주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과에서 계약 의뢰한 ■■■■■ 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건을 의뢰한 대로 각각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 ○○건, ▲▲▲▲▲ ○○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입금액이 2015년 ○○○천원, 2016년 ○○○천원, 2017년 ○○○천원, 2018년 ○○○천원 등 총 ○○○○천원으로 경쟁입찰 등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천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예산절감 가능액은 물품 낙찰하한율 88%적용)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 팀 물품 구입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행적 업무처리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과 실무담당자 행정○급 ●●●, @@@@과 전 실무담당자 행정○급 ㉠㉠㉠(현 ◆◆동)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 ■■■■■ 위탁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과)에서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 안전에 대한 단체교육, 체험학습 등 ▲▲안전교육의 편의제공을 위해 매년 수탁자를 선정하여 ■■■■ ■■■■■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2. 근거 없는 민간위탁 시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밀양시 @@@@@@과에서는 민간위탁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함에도 2015년~2018년 근거법령 및 조례도 없이 ■■■■ ■■■■■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요구)하고 편성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3. 권한 없는 사업부서에서 협약(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1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10.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1항에는 본청의 회계공무원으로서 재무관은 행정국장으로 분임재무관은 회계과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밀양시 @@@@@@과에서는 2015년~2018년 ■■■■ ■■■■■■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민간위탁사업의 협약(계약)체결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업부서인 @@@@@@과에서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권한 없는 자가 계약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4.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밀양시 ■■■■ ■■■■■■ 및 찾아가는 ○○○○ 협약서」 제14조에는 이 협약서 및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고 하고,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는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제7조에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밀양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밀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밀양시 @@@@@과에서는 2015~2017년 ■■■■ ■■■■■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수탁기관 선정 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적격자 선정을 위한 조례규정 및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형식적 심사 및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등 위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 ■■■■■ 위탁 운영 업무를 추진하면서 근거 없는 민간위탁 시행, 권한 없는 부서에서 계약체결 및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등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과 전 실무담당자 행정○급 ◆◆◆(현 ㉠㉠과), @@@@@과 전 실무담당자 행정○급 ○○○(현 ○○동)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공유재산 매각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는 밀양시 ○○면 ○○리 ■■■■-7번지, 지목 대지, 186㎡(이하 “매각 부동산”라고 한다)의 공유재산을 2015. 7월부터 11월까지 매수신청 접수하고, 2015. 12. 8.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검토 보고하였으며, 2015. 12. 23.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개최하여, 2016. 4. 26. ○○○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다.

2.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3호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068호, 2014.10.29. 일부개정) 제39조제1항 제7호에서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

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한 내용

밀양시 □□□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매각물건이 면지역에 위치한 경우 매각대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대상으로 판단하여 수의계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 10. 29. 개정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면지역에서 재산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거나,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일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밀양시 □□□가 매각한 매각 부동산은 ○○면사무소와 도로를 경계로 인접해 있고, 면사무소 창고와는 연접해 있어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밀양시 □□□는 공유재산 매각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공유재산 매각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 전 실무담당자 행정6급 ○○○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람 (훈계)
- ② 이 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공유재산 대부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 및 □□과에서는 밀양시 □□길 13 에 ●●●단체협의회(66.72m²) 및 (사)○○○협의회(34.56m²)에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서 제1항에서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에서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대장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로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한 내용

그런데도, 밀양시 ○○○과에서는 ●●●단체협의회와 2018. 1. 1. ~ 2018. 12. 31. 까지 밀양시 ○○○길 13 건물 66.72㎡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에서는 (사)○○○협의회와 2015. 4. 10. ~ 2019. 12. 31.까지 밀양시 ○○○길 13 건물 34.56㎡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단체협의회 사무실은 대장가격이 34,819,573원이며, (사)○○○협의회 사무실은 대장가격이 35,960,040원으로 대장가격이 3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의 일반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특정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였을뿐 아니라, 일반입찰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산정하여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대부료 요율로 계산된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밀양시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공유재산 대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담당자 행정6급 ■■■, 2015. 3. 1. ~ 2015. 12. 31. 까지 공유재산 대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담당자 행정7급 ■■■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람 (훈계)
- ② 관련 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밀양시(□□□)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가. 밀양시 □□□에서는 2013. 5. 7. ■■■이 승용차 15가■■■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으로 하여 취득세 1,434천 원을 감면하는 등 총 14명의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며,
- 나. 2015. 2. 24. ■■■는 ○○읍 △△리 ■■■번지의 13필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108,240천 원을 감면하는 등 총 2명의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 다. 2015. 4. 29. 농업회사법인(주)■■■은 ■■■면 ■■■리 235번지의 1필지 5911㎡ 및 2016. 7. 7. ■■■읍 ■■■리 ■■■-17번지 건물 3,544.97㎡를 취득한 후 밀양시 □□□에 취득세 신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56,727천 원을 감면 받았으며, 2013. 4. 16. △△△는 ■■■■면 ■■■■리 ■■■■-5번지 2,353㎡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2,026천 원을 감면 받는 등 총 10명의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 라. 2016. 1. 4. □□□축산업협동조합은 △△△읍 △△△리△△△-6번지 188.48㎡ 및 2016. 9. 21. △△△읍 △△△리△△△번지의 2필지 11,368㎡를 취득한 후 밀양시 □□□에 취득세 신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53,829천 원을 감면하였으며,

마. 2013. 3. 6. ▲▲▲은 ▲▲▲동 ▲▲▲-8번지 270㎡, 건물 43.3㎡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2,850천 원을 감면 받았다.

바. 2015. 6. 9. ▲▲▲은 ▲▲면 □□□리 □□□-2번지의 1필지 448㎡ 건물 456.33㎡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1,709천 원을 감면 받았다.

2. 관계법령 및 위법부당한 사항

가. 장애인 차량 감면조건 위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제29조에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먼저 감면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밀양시 □□□에서는 취득세 감면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5. 7. □□□이 15가□□□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이전하여 취득세 추징 대상임에도 취득세 2,481천 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총 14건에 대하여 취득세 37,185천 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창업중소기업 감면조건 위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밀양시 □□□에서는 취득세 감면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2. 24. ▲▲▲가 ▲▲▲읍 ▲▲▲리 413번지의 13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등 총 3건에 대한 취득세 363,665천 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농업법인 및 자경농민 감면조건 위반에 대한 취득세 추정 누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밀양시 □□□에서는 농업법인 및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5. 4. 29. 농업회사법인(주)▲▲▲이 ■■■읍 ■■■리 ■■■-17번지 건물 3,544.97㎡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감면 받은 후 2년 이내인 2016. 12. 31. (주)■■■에게 임대하여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4건, 82,577천 원을 추정하지 않았으며, 2013. 4. 16. ■■■가 ■■■면 ■■■리 681-5번지 2,353㎡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감면 받은 후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3,691천 원을 추정하지 않는 등 10건, 34,702천 원을 추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업법인 및 자경농민에 대하여 총 14건, 117,279천 원을 추정하지 않았다.

라. 축산업협동조합 감면조건 위반에 대한 취득세 추정 누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연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밀양시 □□□에서는 2016. 1. 4. ■■■축산업협동조합은 ■■■읍 ■■■리■■■-6번지 188.48㎡ 및 2016. 9. 21. ○○○읍 ○○○리 ○○○번지와 2필지 11,368㎡를 취득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감면 받은 후 2016. 1. 4. 취득한 건물인 ○○○읍 ○○○리 ○○○-6번지 188.48㎡를 취득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고, 2016. 9. 21. 취득한 토지인 ○○○읍 ○○○리 1238번지에 2018. 5. 16. 건물을 준공하여 감면물건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79,352천 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마. 주택유상거래 감면 취득세 추징 누락

「지방세특례제한법제」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밀양시 □□□에서는 2013. 3. 6. ○○○이 ○○○동 ○○○-8번지 건물 43.3㎡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받은 후 감면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1,501천 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총 15명, 25,360천 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바. 어린이집 감면 취득세 추징 누락

「지방세특례제한법제」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밀양시 □□□에서는 2015. 6. 9. ○○○이 ○○○면 ○○○리 ○○○-2번지와 1필지 448㎡ 건물 456.33㎡를 취득하였으나, 2017. 4. 18. 경영이 어려워 2017. 4. 18. 휴지 신청을 한 후 2017. 7. 16. 매각하였으므로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음에도 취득세 14,552천 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사. 노인복지시설 및 주택개량사업 감면 취득세 추정 누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 16조에서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밀양시 □□□에서는 취득세 감면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7. 17. ○○○○이 ○○○○동 ○○○○-13번지 254.8000㎡ 건물 126㎡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받은 건축물을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운영하다가 2014. 6. 20. 폐지하고 2015. 10. 21.매각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4,533천원을 추징하지 않았으며,

2014. 6. 12. □□□는 □□□읍 □□□리 □□□-2번지 건물 115.77㎡을 신규 취득하면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주택개량 대상자 감면요건에는 건축물이 100㎡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100㎡초과 건축물시 감면에 배제되어야 함에도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등 총 2건, 취득세 2,007 천 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 실무담당자 세무6급 ●●●●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 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취득세 643,931천 원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다수공급자계약물품 분할 구매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2017. 04. 10. ~ 05. 31. 읍면동지역 및 국도변 가로(보안)등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340,113천 원(747개)의 LED가로(보안)등기구를 6차례에 걸쳐 ★★과에 구매 의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관급자재로 구매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제5항의 규정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제1항, 제4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및 제6조(제안요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⁹⁾ 물품으로서 1회 납품요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등록된 물품을 임의로 선택하여 구매하는 대신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이하 “2단계 경쟁”이라 한다)하여 구매하고,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이 동일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1회 납품요구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안을 요청받은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9) 수요기관의 공통 필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함

따라서 밀양시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1회 납품요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2단계 경쟁을 거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밀양시 ★★과에서는 2017년 △△과로부터 6회에 걸쳐 읍면동 가로보안등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340,113천 원 상당의 LED가로(보안)등기구 747개의 구매를 요청 받았다.

그런데 ★★과에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세부품명번호(39111608-02)가 동일한 LED보안등기구를 구매하면서 △△과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물품구매를 접수(가곡동지역/2017.03.31., 교동지역, 삼문동지역/2017.04.30.)하고도 2017.04.10. (주)○○○○○로부터 40,660천 원 상당의 LED보안등기구 107개, (주)\$\$\$\$\$로부터 50,540천 원 상당의 LED보안등기구 133개, 2017.04.12. (주)◆◆◆로부터 53,960천 원 상당의 LED보안등기구 140개 등 총 145,160천 원 상당의 LED보안등기구(380개)를 3개 업체로부터 각각 1억 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하는 물품조달 요청문서를 기안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구매하였다.

그리고 나서 2017.04.28. 39,053천 원 상당의 LED가로등기구(131개)를 (주)□□□□□□□□□□로부터 추가 구매하는 물품조달 요청문서를 기안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구매하였다.

또한 2017년 5월 △△과로부터 읍면동지역 국도변 가로등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155,900천 원 상당의 LED가로등기구 236개 구매를 의뢰받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분류번호(3911160302)가 동일한 LED가로등기구를 구매할 때에도 2017.05.26.부터 같은 해 05.31.까지 (주)●●●로부터 75,600천 원 126개의 LED가로등기구를, (주)◆◆◆로부터 80,300천 원 110개의 LED가로등기구를 각각 1억 원 미

만으로 분할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이 아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였다.

그 결과 밀양시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받아 34,011천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인 △△과 지방공업주사 ▣▣▣▣과 ★★과(현 경상남도 ■■■■■과) 지방행정서기 ☒☒☒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특정기관과의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관)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임진왜란의 영웅이자 밀양시의 자랑인 사명대사의 업적과 활약상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자 (재)○○○○○방송·○○텔레비전주)과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2017.10.18.~2018.10.17.)”을, ■■■■■■■■실에서는 밀양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로 시민 자긍심 고취와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밀양시 대표 브랜드 개발 용역(2016.03.28.~2016. 12.23.)”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 특정기관과의 수의계약 용역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소관부서
계		197,363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	'17.10.18.	100,000	수의계약	(재)○○○○○방송· ○○텔레비전주)	♣♣♣♣과
밀양시 대표 브랜드 개발 용역	'16.03.28.	97,363	수의계약	○○대학교 산학협력단	■■■■■ ■■■관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는 본청의 회계공무원으로서 재무관은 행정국장으로 분임재무관은 회계과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의 경우

밀양시 ♣♣♣♣과에서 추진한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은 사명당 시나리오 구성, 출연자 섭외, 국내외 다큐 드라마 재연 촬영, 컴퓨터 그래픽 작업, 편집, 지상파 방송사 방영이 주된 내용으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비디오물제작업 등록업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등도 위 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밀양시는 위 용역에 대해 일반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방을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밀양시 ♣♣♣♣과에서는 (재)○○○○○○방송·○○텔레비전(주)과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2017.09.04.)한 사유를 들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 위 방송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분임재무관(★★과장)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당 사업부서인 ♣♣♣♣과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밀양시와(재)○○○○○방송·○○텔레비전(주)과 맺은 3자간 체결한 계약서 제2조(프로그램)에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1회(60분)를 공중파(KBS, MBC, SBS) 중 한 곳과 ○○○○○방송 및 ○○○○○TV에 2018년 부처님 오신날(2018.05.22.) 또는 호국보훈의 달(6월) 특집으로 프로그램을 송출하도록 되어 있고, (재)○○○○○ 방송 및 ○○텔레비전(주)에 선금급으로 70백만원을 기지급(2017.11.01.) 하였음에도 밀양시 종합감사 기간(2018.06.18.~06.29.) 중 확인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이 지상파 등에 방송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계약자의 계약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밀양시 대표 브랜드 개발 용역의 경우

밀양시 ■■■■■실(현 ◇◇면)에 추진한 “밀양시 대표 브랜드 개발 용역”은 브랜드 프로젝트 기반 조성 및 현황 조사, 브랜드 분석 및 진단, 브랜드 전략방향 설정 및 개발 등이 주된 내용으로 학술연구 종목으로 등록된 연구기관, 단체, 대학 등과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 일반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밀양-○○대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대표 브랜드 개발 용역 제안서 제출과 지역 소재 대학으로서 밀양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수한 연구진 보유 등의 사유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1인 적으로 계약으로 ★★과에 의뢰 후 계약을 체결(2016.3.28. 용역비 97,363천원)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브랜드 개발 용역을 낙찰 받으려는 다른 업체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의 실무책임자 지방행정주사 ▶▶▶과 실무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 ■■■■실(현 ◇◇면)의 실무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무안용호놀이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사)무안용호놀이 보존회(회장 ♠♠♠)에 2015년부터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인 무안용호놀이의 계승발전과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03,200천원(발표공연비 91,200천원, 운영비 12,000천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표1] 무안용호놀이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및 운영비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계	309,600	103,200	103,200	103,200	
발표공연비	273,600	91,200	91,200	91,200	
운영비	36,000	12,000	12,000	12,000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내지 제32조의6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 또는 해당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내지 제23조, 제26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그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 전에 보조금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고,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해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을 한 후에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밀양시 ♣♣♣♣과에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을 경우 무형문화재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산을 완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밀양시 ♣♣♣♣과에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데도 무안용호놀이 무형문화재 단체인 (사)무안용호놀이 보존회에 2015년부터 매년 12,00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사)무안용호놀이 보존회에서 제출한 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서)

에 무안용호놀이 공개발표회 참여자의 출연료에서 보존회 회원 회비 공제 후 지급, 출연자 참석여부 미확인(날인 또는 서명 없음), 운영비로 보존회장 업무추진비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지급 허위 정산보고, 보조금 예금이자(47,280원) 미반납, 보조금 계좌에 자부담금 예치 미확인 등 적정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 아무런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증빙자료가 적정하다고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보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위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인 ♣♣♣♣과 지방행정주사보 ○○○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무안용호놀이 보존회장 수고료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762천원을 회수조치하고, 앞으로 보조단체 운영비와 무관한 경비(업무추진비, 간담회 식비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소홀

소 관 기 관 밀양시(■■■■■■■■관)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 ■■■■■■■■■■관에서는 ●●읍사무소에서 발주한 도야안길 정비공사('15.4~'15.6), 귀명마을 안길 정비공사('15.7~'15.10) 등 2개 사업(31백만원)의 시공업체(■■■건설주) 대표로부터 금품(홍삼세트 495천원)을 받은('15.09.04.) 공사 감독공무원에게 경징계(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495천원>) 처분을 하였다.

[표1] 금품 제공 업체 및 수수자 현황

금품 제공 업체			금품 수수자			금품 수수자 신분상 조치사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건설주 (■■■■■)	밀양시 부북면	▲▲▲-81- ♥♥♥♥♥	밀양시 ●●읍사무소 (현 ○○○○ ○○과)	개발 담당 (지방 시설 주사)	▲▲▲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495천원) ※ ●●읍 발주 공사의 시공업자로부터 선물 수수(홍삼세트5개<시가 495천원>)로 지방공무원법 및 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성실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위 법률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밀양시에서는 위 업체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과 등 관련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업체는 2015.09.04. 위 공사의 감독공무원인 밀양시 ○○읍사무소 지방시설주사 ■■■에게 49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시설주사 ■■■은 밀양시 ■■■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경징계(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495천원>) 처분을 받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밀양시 ■■■관에서는 위 [표1] 금품 제공 업체 및 수수자 현황과 같이 2015.09.04. 금품수수로 공무원 징계조치 외에도 금품을 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함에도,

밀양시 종합감사 기간(2018.06.18.~06.29.) 중 공사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업체로부터 금품(홍삼세트 495,000원)을 받은 위 공무원에 대하여 2015.11.12. 경징계 조치 통보만 하고, 금품을 공여한 위 업체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위해 ★★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업체는 가곡지구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공사 등 24건 429,027천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공무원 비위처분 조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위 업무를 소홀히 한 ■■■관 실무담당자 지방시설주사보 ▲▲▲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금품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1인 수의계약 설계변경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1인 수의계약 설계변경 부적정

밀양시 @@과, ◆◆과에서는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건의 공사를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에도 사업비를 증액 변경하였으며,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증액하여 계약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과 지방행정주사 ◇◇◇은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번호 : 2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마을상수도 ◆◆◆◆◆ 교체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외1)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 매년 마을상수도 ◆◆◆◆◆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밀양시 @@@@과에서는 ◆◆◆◆◆ 분할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동일 종류의 공사임에도 2015년 4건 73백만 원, 2016년 9건 132백만 원, 2017년 32건 389백만 원, 2018년 12건 213백만원 총 57건 908백만 원 사업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과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밀양시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매년 동일 예산을 동일하게 분할 발주하여 계약 의뢰된 공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당하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함에도 기존 방식대로 계약하였으며,

특히, 특정 2업체((주)◇◇◇◇밀양지점, ●●●)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과 지방환경◆◆◆ ◇◇◇ 실무책임자로서, @@@@과 지방공업◆◆ ◇◇◇은 실무담당자로서, ◎◎과 지방행정◆◆ ◇◇◇은 실무책임자로서, ◎◎과(현 ㅁㅁㅁㅁ과) 지방행정◆◆◆ ◇◇◇, ◎◎과 지방행정◆◆ ◇◇◇실무담당자로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통보

제 목 밀양@@@@@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밀양@@@@@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시설물 준공을 307일 지연하여 @@과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였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시행

밀양시 @@과에서는 “밀양@@@@@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2013년)”가 307일이 지연되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일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 〇〇〇,〇〇〇천 원을 부과하였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완성(공종 준공 적용) 부분만을 공제하여 산정한 결과 〇〇〇,〇〇〇천 원을 부과하여야 했으나 〇〇〇,〇〇〇천 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과(현 ●●●●●과) 지방행정◎◎ ◇◇◇은 실무책임자로서, @@과(현 ▽▽사무소) 지방행정◎◎ ◇◇◇는 실무담당자로서 지연배상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과소 부과된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밀양시 답변 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밀양시 홍보잡지 기획 및 제작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외 1)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밀양시 @@@@@관에서는 매년 밀양시 홍보를 위한 홍보지 발간 예산 89,000천 원을 책정하고 이를 시기별(3개월 단위로) 1인 건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분할하고 특정업체와 계약하여 홍보잡지를 기획 제작하였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밀양시 @@@@@관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1인 건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분할 발주하여 특정업체와 계약토록 @@과에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밀양시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매년 동일 예산을 동일하게 분할 발주하여 계약 의뢰된 용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당하다면 이를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매년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관(현 △△면) 지방행정○○○(현 지방행정○○○○) ◇◇◇는 실무책임자로서, @@@@@관 지방행정○○○ ◇◇◇는 실무담당자로서, @@과 지방행정○○◇◇◇는 실무책임자로서, @@과 지방행정○○ ◇◇◇, @@과(현 ⅢⅢⅢ과) 지방행정○○ ◇◇◇, @@과(현 ⅢⅢⅢⅢ과) 지방행정○○○ ◇◇◇는 실무담당자로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는 1994. 2. 17. ○○읍 ○○리 일원에 도시공원인 ♡♡체육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15. 6. 11.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1974. 9. 14.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된 ○○읍 ○○리 일원의 ♡♡공원을 2013. 11. 7.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2017. 10. 26. 근린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결정 고시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하여야 하고,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걷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공중전화실에 한하며,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한다) 및 편익시설로 하되,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4에 따라 공원면적당 소공원에서는 20% 이하 및 체육공원에서는 50%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 부적정

밀양시 ☆☆☆☆과에서는 ♡♡체육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과-5682호(2015. 4. 3.)로 ★★과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체육공원에서의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양시설은 설치항목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아래 표 1과 같이 공원관리시설을 미계획하였고, 운동시설(7,636㎡) 중 축구장 1종목만 계획하였으며, 교양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관찰데크(73㎡)를 설치하는 것으로 부적절하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표 1] ♡♡체육공원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	구성비 (%)	비 고
계		22,800	100	
기본시설	소계	2,431	10.7	
	도로	2,268		
	광장	163		
유희시설	놀이터	215	0.9	
편익시설	소계	1,030	4.5	
	주차장	990		
	화장실	40		
운동시설	축구장	7,636	33.5	
교양시설	관찰데크	73	0.3	
녹지	녹지	11,415	50.1	

나.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미이행

밀양시는 2013. 11. 7. ♡♡공원(근린공원)에 대하여 일부 면적을 조정하여 공원 구역을 변경결정하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결정고시 하였으나, 2017. 10. 26.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소공원으로 공원 종류 변경 및 공원구역을 변경(54,379㎡→5,730㎡) 결정 하였음에도 소공원의 기준에 맞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공원시설면적이 소공원의 시설면적 기준인 20%를 초과(81.4%)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과에서는 ♡♡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과-2050호(2018.3.12.)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라는 의견만 제시한 채 ☆☆☆☆과-4755호(2018.3.27.)로 회신하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된 ♡♡공원 조성은 공원조성계획 검토를 소홀히 하여 도시공원법에 부적합하게 조성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표 2] ♡♡공원 조성계획 결정현황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당초(근린공원)		변경(소공원)		비고
		부지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구성비 (%)	
계		54,379	100	5,730	100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4,381	8.1	1,274	22.2	
조경시설	잔디밭	3,391	6.3	3,391	59.2	
교양시설	야외교육장	1,575	2.9	-	-	
운동시설	운동장 등	1,874	3.4	-	-	
편익시설	전망쉼터 등	4,294	7.9	-	-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589	1.1	-	-	
녹지	녹지	38,275	70.3	1,065	18.6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체육공원 및 ♡♡공원과 관련하여 공원조성계획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와 ○○○ 및 관련법령 검토 등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체육공원 및 ♡♡공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조속히 변경결정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토목)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 ★★★★★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토목)은 밀양시(☆☆과)가 2017. 10. 20. ♡♡시 소재 (주)♠♠건설 대표이사 ○○○와 663,833천 원에 계약하고, 2017. 10. 26. 착공하여 2019. 10. 15. 준공예정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등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 점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시장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별표 4에 따라 소공원에서는 20%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천 하천기본계획 저촉

밀양시 ☆☆과에서는 2017. 8. 9.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 친환경주차장 L=420m, ◇◇천경관개선 L=418m, ♡♡공원 A=6,986m²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사업구간에 포함된 ◇◇천은 2013. 11. 28. 경상남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고시(경남고시 제2013-575호)하고,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경남고시 제2013-576호)

한 지방하천임에도, 밀양시 ☆☆☆과에서는 ☆☆☆과-24980호(2016. 10. 25.)로 사업 시행 예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과로 신청하였으나, 사업구간인 복개된 친환경주차장 조성(L=420m) 구간도 ◇◇천 하천구역으로써 L-U형 측구 설치(L=173m) 등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신청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과에서는 ★★★★★과-20772호(2016. 11. 7.)로 ◇◇천 하천공사 시행 허가를 협의하면서 「하천법」 제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함에도 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천경관개선사업으로 설치하는 목교(교량 : 인도교)는 ◇◇천 하천기본계획 상 No.7+39 지점에 해당 되어 계획하폭이 13m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교의 경간장은 12.1m로써 계획하폭에 1m 정도 부족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하천공사허가 및 실시계획을 인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천은 2017. 11. 2. 도시계획시설 중 방재시설인 하천으로 결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실시 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공원시설 부지면적 과다 조성

♡♡공원은 2017. 10. 26. 근린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결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20% 이하로 조성하여야 함에도 공원면적 5,730㎡ 중 공원시설인 기반시설(광장) 1,274㎡, 조경시설 3,391㎡로 계획하여 공원 시설 부지면적 20%를 초과한 81.4%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한 사실이 있다.

다. 감독업무 소홀

「하천설계기준(설계편)」에 따르면 호안 비탈덮기의 높이는 특별히 중요한 제방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획홍수위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천경관개선을 위한 호안 비탈덮기인 친환경블록을 계획홍수위 이상 설치 하는 것으로 공사비 17,700천 원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으며,

친환경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을 시공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2,480천 원 감액요인이 발생하는 등 위 도합 공사비 20,180천 원 상당액 설계변경 감액이 필요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하천공사 협의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검토 등 업무협의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설계(교량) 검토·하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 및 관련법령 검토 등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목교(인도교)는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재검토 후 하천관리부서와 하천점용 허가 등 재협의 하시고, 도시계획시설사업(◇◇천경관개선) 실시계획인가 및 ♡♡공원 조성은 조속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천 호안공 친환경블록 등 과다하게 설계된 도합 공사비 20,180천 원 상당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간 도시계획도로 감독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밀양시(☆☆과)가 2016. 4. 28. ♣
♣군 소재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과 814,474천 원에 계약하고, 2016. 4.
28. 착공하여 2017. 9. 27. 준공한 사업이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
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
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와 제17조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밀양시 ☆☆☆과에서 2016. 4. 12.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2017. 9. 27.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비탈면보호를 위한 잔디 226㎡를 식재(줄때 및 평때)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잔디식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2,327천 원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역L형 옹벽 위 산마루 측구인 U형 측구(30×30) L=54m를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측구를 미시공하였음에도 확인도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3,841천 원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고,

도로 성토를 위한 토공규준틀 1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 1,289천 원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주차장 진출입구간(No.21+7.8~No.21+17.8)은 당초 L=10m로 설계

하였으나, 차량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L=16.3m로 확장 시공하면서 L형측구 및 경계석(L=6.3m), 보도블록(14㎡) 등 수량이 감 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1,284천 원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고,

L형 측구 시공을 위한 1,129㎡ 비닐깔기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비닐깔기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보차도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거푸집을 시공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9,971천 원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 도합 공사비 17,423천 원 상당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메쉬웁스 12경간(L=24m)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현장설치도로 산업(주)와 계약 체결하였으나, 메쉬웁스가 2018년 3월 이후에 설치하였음에도 시공되기 전인 2017. 12. 28. 관급자재 물품검수를 실시하여 관급자재대 2,388천 원 상당액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실무책임자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비탈면 보호공 잔디식재(226㎡) 및 U형 측구(L=54m) 등 도합 공사비 6,168천 원 상당액은 조속히 설계서대로 재시공 조치하고, 진출입구간 및 L형 측구 등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도합 공사비 11,255천 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권고요구

제 목 ○○○교 건설사업 설계검토 소홀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국가산단 지원 ○○○교 건설사업은 밀양시(☆☆과)가 2017. 8. 3. ♡♡시 소재 (주)♡♡ 대표이사 ○○○와 30,037,043천 원에 계약하고, 2017. 8. 7. 착공하여 2021. 8. 26. 준공예정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밀양시 ☆☆과에서 2017. 3. 22. ○○국가산단 지원 ○○교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교량 시·종점부 접속슬래브 구간의 포장 수량이 교면포장과 일반 노면 포장 수량을 중복(368m²) 산출하여 교면포장 공사비 8,619천 원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고,

교량구간 차로는 현재 왕복 4차로로 계획하였으나, 장래 교통량 증가에 따라 차로를 왕복 6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보도구간은 장래에 차도로 이용되어 교면포장(2,807m²)을 일반아스콘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칼라아스콘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56,532천 원 과다 설계하였으며,

공사용 가도에 비탈면보호를 위한 줄떼 2,152m²를 식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가도는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할 임시 가시설물이며, 초화류 자연발아로 줄떼 시공이 불필요함에도 11,968천 원 과다 설계하였고,

교각 가시설 슈트파일 시공을 위해 가이드빔 내부 줄파기 L=287m를 인력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 상 기계시공으로 변경이 가능함에도 공사비 1,991천 원 과다 설계하였으며,

기존도로와 시점부 ☞☞교차로를 접속하기 위해 우회도로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우회도로 설치 공사기간에 비해 교통안전시설비용을 과다(교통안전요원 1년) 계상하여 공사비 41,008천 원 과다 설계하였고,

교각기초 현장타설말뚝 굴착 시 발생하는 굴착토 2,335m³를 사토(L=10km)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굴착토를 현장 성토재로 유용할 경우 공사비 42,262천 원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용 가도설치 후 홍수위를 검토한 결과 가도설치로 인한 수위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우기시 가교의 복공판을 해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기시 복공판 설치 및 해체(4회)를 제외하면 공사비 186,967천 원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가설교량 형식변경에 따른 실정보고를 ☆☆과-3586호(2018. 5. 3.)로 승인하면서 강관파일(60본) 인발 단가적용은 본당으로 향타기 작업량을 곱하여 단가산출을 하여야 하나, 나누기로 잘못 적용하여 공사비 100,100천 원 과다 계상하였으며,

또한, 가설교량은 H빔을 주재료로 하는 공사로 설치 및 해체 품은 철골공사품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현재 시공되어 있는 가설교량의 제작형식이 건설신기술제품이 아님에도 건설신기술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 680,000천 원 과다 계상하는 등 위 도합 공사비 1,129,447천 원 상당액을 설계변경 감액이 필요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 촉구하니, 앞으로 설계기준 등을 준수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용역감독 및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교면포장 및 가설교량 등 과다하게 설계된 도합 공사비 942,480천 원 상당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가도설치에 따른 홍수위 검토결과 수위변화가 없으므로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우기시 공사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복공판 설치해체를 이행하지 않고 186,967천 원 상당액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방청과 재협의 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권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00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 00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7.11.15. ##시 소재 \$\$종합건설(주)(대표 AAA)와 도금액 966백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2020.11.19.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같은법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허가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 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사항이 고시되어야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관할 구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 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 이상(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에게, 나. 50만㎡ 이상 20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 이상 100만㎡)의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이나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다. 산지면적이 5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 미만)의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이나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행정절차 이행 소홀

그런데도 밀양시 00과에서는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행으로 기존도로구역이 변경되므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에도,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2018. 2.12.~ 2.27.)절차를 진행한 후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여 결국 도로구역 변경사항을 결정·고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으로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못하여 현실지형과 지형도면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아래 [표 1]과 같이 본 공사시행으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지역의 산지 16,145㎡가 편입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밀양시장(허가과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관련부서에 협의요청(2018. 3. 7.) 후 해당부서의 보완요청(2018. 3.21)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결국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표 1] 산지전용 허가 미 이행 현황

사 업 명	사 업 량	산지전용 대상면적	소 재 지	허가권자	협의요청일	보완요청일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확장 L=2.752km	16,145㎡	00시 00읍 00리 산 00-0번지 외 00필지	밀양시장 (허가과장)	2018. 3. 7.	2018. 3.21.

나. 설계내역 검토소홀 등 공사감독 업무소홀

밀양시 00과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 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BB호’쪽 확장부는 기존 가로수 및 경계웬스 등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옹벽 등의 구조물 시공이 필요치 않음에도 법면부에 L형 옹벽시공을 일괄적으로 계획하여 공사비 약 145,255천원 상당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2014. 3. 6.)」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임에도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의 40%이상을 순환골재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 약 32,249천원 상당이 과다 계상되어져 있는 등 현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위 도합 약 177,504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에도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현장관리 및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업무를 누락하고 설계도서와 현장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00과 현 실무담당자 ## &급 QQQ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아울러,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일괄적으로 반영된 L형 옹벽과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미반영 등으로 과다하게 반영되어져 있는 공사비 약 177,504천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

③ 「도로법」 제25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누락된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배수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AA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 AA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2017. 5.16. WW시 소재 (주)EE건설(대표 RRR)과 도금액 1,314백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2019. 5.18.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관할 구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예정지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배수개선사업 중 수해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계획

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행령 제98조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검토를 의뢰하여야 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같은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실비산정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의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행정절차 이행 소홀

그런데도 밀양시 AA과는 「@@지구(##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신설되는 유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반시설로서 사업 시행 전에 미리 같은법 제30조 및 제43조,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행정정차를 누락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못하여 현실지형과 지형도면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유수지설치 등 배수개선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같은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법 제9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세부설계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승인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본 공사로 신설되는 배수펌프장은 국가하천인 밀양강으로 배출되도록 계획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2종 시설물이며,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기초파일 시공 시 항타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임에도 발주청인 밀양시에서는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시공사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간과하는 등 안전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있다.

나. 설계내역 검토소홀 등 공사감독 업무소홀

밀양시 AA과는 「@@지구(##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배수펌프장 기초파일 시공에 따른 실제파일 근입깊이와 설계물량과 상이(설계 660m→실시공 634m)할 경우 정산(26m)처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공사비 약 2,268천원 상당의 감액요인이 있으며,

배수장 및 토출수조 등 높이 2m 이상의 구조물작업 시 작업자의 작업성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계에 반영된 강관비계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간이 발판으로만 작업하여 작업자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됨에도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비도 정산하지 않아 약 4,461천원 상당의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사용 자재에 대한 소운반비용 반영 시 대로변에 위치한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시공에 필요한 자재까지 일괄 소운반비용을 반영하여 공사비 약 21,275천원 상당의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며,

본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가설웬스 및 세륜시설 설치비용은 원가 계산에 반영된 환경보전비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비용을 설계 변경하여 반영함으로서 공사비 약 15,620천원 상당을 부당하게 증액하는 등 현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위 도합 약 43,624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에도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현장관리 및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수립·승인 등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업무를 누락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미반영 및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설계도서와 현장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소홀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AA과 현 실무담당자 ZZ X급 MMM과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AA과 실무책임자 ZZ

S급 DDD 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임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부실벌점”부과 및 고발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아울러,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일괄적으로 반영된 자재의 소운반비용과 설계변경으로 부당하게 반영된 가설웬스 및 세륜시설 설치비 등 과다하게 반영되어져 있는 공사비 약 43,624천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 등 누락된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7. 2.17. TT시 소재 YY종합건설(주)(대표 UUU)와 도금액 3,625백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2020. 2.21.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제2항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1항에는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되어져 있고, 같은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4항 및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79호)」에 따르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한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발주자는 첨부서류의 포함여부 등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가 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같이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하도급계약심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2항에서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와 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 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벌칙)에 따르면 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하도급관리 소홀

그런데도 밀양시 @@@과에서는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1-나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29조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계약(변경)통보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표 1]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제25조를 위반하여 해당공종에 대한 면허를 가진 전문공사 외 공종을 하도급계약 공종에 포함하여 하도급계약 통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여 전문공사면허(능력)가 없는 공종까지 하도급사가 시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하도급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등록된 건설업종 외 타 공종 포함 하도급계약(시행)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하도급 계약사항		적정 면허	하도급 계약면허 (하도급사)	시공자격
공 종	세부 공종			
토 공	토공작업 구조물깨기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SS건설(주) 대표 DDD	부적정
관로공	관 접합 및 부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적 정
변설공	밸브설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적 정
포장공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부적정

나. 수압시험 관리소홀 등 공사감독 업무소홀

또한, 밀양시 @@@과에서는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7년분 공사의 상수관로 매설에 따른 누수 등 시공상태 검증을 위하여 200m마다 1회씩 실시토록 계획된 수압시험을 2017. 5.16. ~ 7.30.까지 시공사에서 실시하였으나, [표 2]와 같이 계획된 6회 중 2회는 같은 장소에서 사진촬영 각도만 다르게 촬영하여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수압시험을 부적절하고 부족하게 실시하였음에도 공사감독은 수압시험 현장에 입회하지도 않는 등 수압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관로매설의 견실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준공처리 하였으며,

[표 2] 수압시험 실시 현황

총 계획				2017년분				
계	2017년분	2018년분	장 래	계획	실 시			미실시
					계	정상	부적절	
102회	6회	21회	75회	6회	6회	4회	2회	-

수압시험을 설계내역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설계에 반영된 수압시험비를 정산 없이 지출하여 공사비 약 950천원 상당이 부당하게 지출되었으며, 상수관로 매설 후 도로 포장복구를 위한 두께 15cm의 가포장은 기층재료로 일괄시공이 가능하며 실제 현장에서도 일괄시공하고 있음에도 10cm두께로 1차 시공 후 다시 5cm포장하는 것으로 포장면적을 2중으로 반영하여 공사비 약 246,481천원 상당이 과다계상 되어져 있으며, 상수관보호용 골재를 비경제적인 모래대신 석분으로 변경할 경우 자재비 약 26,675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현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위 도합 약 274,106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에도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현장관리 및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하도급계약(변경)통보서의 적정성 등 하도급계약내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과 전 계약담당자 FF &급 GGG(현 KK면)과 현 계약담당자 FF \$급 QQQ, 하도급계약(변경)통보서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과 전 실무담당자 XX C급 JJJ(현 00과)와 현 실무담당자 XX C급 BBB,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전 실무책임자 XX C급 VVV(현 00과)과 현 실무책임자 XX C급 MMM 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종 외 공종을 하도급공사내역에 포함하여 하도급계약하고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공종까지 하도급사가 시공하도록 한 건설업자(하도급자 포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제96조(벌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영업정지”, “고발”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라며, (통보)
- ③ 수압시험을 계획보다 부족하고 부적절하게 실시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부실벌점”부과 및 “고발”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④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게 계약한 하도급계약은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계획보다 부족하고 부적절하게 실시한 수압시험에 대하여 본 공사 시방기준에 따라 전면 재 실시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⑤ 설계보다 부족하게 실시하였음에도 정산 없이 지출된 수압시험비와 2중으로 계산된 가포장 면적 등 과다계상 된 공사비 약 274,106천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⑥ 계약 및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 추진한 「##~\$\$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는 2017. 3.20. DD시 소재 GG건설(주)(대표 HHH)와 도금액 869백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2018. 3.23. 준공한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6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밀양시 @@@과에서는 「##~\$\$\$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가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상수관로 매설에 따른 누수 등 시공상태 검증을 위하여 제수변 설치위치마다 1회씩 16회 실시토록 계획된 수압시험을 2017.10. 5. ~ 12.10.까지 시공사에서 실시하였으나, 아래 [표 1]과 같이 계획된 16회 중 4회는 같은 장소에서 사진촬영 각도만 다르게 촬영하여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수압시험을 부적절하고 부족하게 실시하였음에도 공사감독은 수압시험 현장에 입회하지도 않는 등 수압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관로매설의 견실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준공처리 하였으며,

[표 1] 수압시험 실시 현황

수 압 시 험 (D250m/m)				
계 획	실 시			미 실시
	계	정 상	부적절	
16회	16회	12회	4회	-

수압시험을 설계내역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설계에 반영된 수압시험비를 정산 없이 지출하여 공사비 약 2,656천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며, 상수관로 매설구간 중 BB천과 NN천 횡단구간의 시공성 확보를 위한 가물막이는 하천수 흐름이 적은 건기시공으로 가물막이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약 6,894천원 상당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등 위 도합 약 9,550천원 상당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현장관리 및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수압시험에 대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고 당해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과 현 실무담당자 XX E급 TTT와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현 실무책임자 XX C급 QQQ 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라며, (훈계)

② 수압시험을 계획보다 부족하고 부적절하게 실시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부실벌점”부과 및 “고발” 등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아울러, 설계보다 부족하게 실시한 수압시험비와 시공되지 않은 가물막이 설치비 등 정산 없이 지출된 공사비 약 9,550천원 상당은 시공사로부터 조속히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원가계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양시 \$\$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7. 6.13. AA도 SS시 소재 (주)DD(대표 FFF)와 3개사와 도금액 999,900천원에 계약 체결하여 2018. 4.10.준공예정으로 진행하던 중 2018. 3.19.자로 WW부와의 재원협의를 위하여 용역을 일시중지 중에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 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용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2절에서는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용역준공 전에 미리 시정 조치하는 등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용역과정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밀양시에서는 「밀양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본 용역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용역설계예산서 작성 시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밀양시 \$\$정밀조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된 표준공사비의 약 150% 수준(국비확보 목적)으로 산정된 소요사업비를 기초하여 추정공사비(24,241백만원, VAT제외)를 적용함으로써 실시설계결과 작성(WW부 협의 중)된 설계예산서 상 공사비(15,342백만원, VAT제외)와의 과도한 차액발생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재산출할 경우 용역비 약 308,000천원 상당의 예산낭비요인이 있도록 용역 원가를 과다하게 계산하였으며,

직접조사항목으로 반영된 AA 내부조사(3km)는 DD 간선차집관로의 불명수 확인을 위하여 계획하였으나, 차집관로 특성 상 만관상태로 조사가 불가하여 본 용역 조사항목에서 제외토록 하였음에도 조사비를 정산하지 않아 용역비 약 15,400천 원 상당의 감액요인이 있는 등 현 용역설계서대로 추진 할 경우 위 도합 약 323,400천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에도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용역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①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용역설계예산서 작성 시 추정공사비를 면밀한 검토 없이 적용하여 용역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과 전 실무담당자 SS R급 TTT(현 00과)와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현 실무책임자 XX C급 BBB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용역설계예산서 작성 시 추정공사비 적용오류로 과다 산정된 용역비와 정산하지 않은 직접조사비용 등 과다반영 되어져 있는 용역비 약 323,400천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문화재 보수 공사 사업선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2015년에 구 @@@ @@@ 보수사업을 위한 사업비 60,000천원(국비 30,000천원, 도비 10,500천원, 시비 19,500천원)을 확보 하여 2015. 12. 16. 실시설계(용역비 10,905천원)를 완료하고,
2016년 \$\$\$\$\$\$에 보수공사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에서 구 @@@ @@@의 문화재지정 해제를 추진 중으로 보수사업 불가 통보로 밀양시에서는 2017년 보수정비사업 공사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하여 설계용역비 10,905천 원을 낭비 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구 @@@ @@@ 보수 공사 추진 시 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선정 시 구 @@@ 소유주인 \$\$\$\$\$\$와 공사 관련 협의 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시행 시 \$\$\$\$\$\$의 공사불가 방침으로 인하여 문화재 보수

공사비를 반납하고 공사 중단으로 설계용역비 10,905천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문화재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선정 시 구 @@@ @@@ 소유주인 \$\$\$\$\$\$와 공사 관련 협의를 소홀히 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 한 실무담당자 시설*급 ○○○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위와 같이 ‘문화재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시설*급 ○○○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③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실시 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건축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위법건축물 조치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건축법」 제79조, 제100조에 따라 건축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여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행강제금 미부과 87건 및 고발 조치 미이행 31건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또한 같은법 제80조(이행강제금)는 허가권자는 같은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00조(벌칙), 제111조(벌칙)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14조를 위반하여 건축 허가·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 위반은 1억원 이하, 신고 위반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따라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밀양시에서는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소재 단독주택 불법 신축 등 위법건축물 87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미조치 및 시정명령 후 철거 등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317,619천 원을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건축물 고발 미조치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소재 일반음식점 증축 등 위법건축물 31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철거 되지 않고 있음에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고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령의 권위손상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위법건축물 조치’와 관련하여 위의 “가,나”와 같이 이행강제금 미부과, 미고발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시설*급 ○○○, 시설%급 ○○○, 시설#급 ○○○, 시설@급 ○○○, 시설&급 ○○○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위의 “가,나”와 같이 ‘위법건축물 조치’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행정*급 ○○○, 행정%급 ○○○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③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적법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미이행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건축법」 제4조의2 및 밀양시 건축조례 제9조(기능)에 따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허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후 그 결과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하여야 함에도,

밀양시 ##과에서는 삼랑진읍 소재 공동주택(지상 10층/지하 1층) 건축허가 시 밀양시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허가를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는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 건축조례 제9조(기능)에는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3.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에는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위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확정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밀양시 ##과에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안전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 후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공동주택(지상 10층/지하 1층)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위와 같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미이행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시설후보 ○○○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위와 같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시설후보 ○○○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③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번호 : 3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시특별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등 3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밀양시 #####과에서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는지 점검하여 관련규정에 부적합 할 시에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하여야 함에도,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 @@@@ 등 4개 시설물에 대하여 2017. 5. 23. 실시한 정밀점검 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항목을 누락하여 부실 점검을 하였고, 춘화농공단지 내 L형 옹벽 등 2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누락하였으며, #####과에서는 부적정 안전점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실태점검)에는 시장·군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등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별표1의2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은 A·B·C 등급 반기 1회, D·E 등급 년 3회, 정밀점검은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등급	정밀점검		비 고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 최초점검 - 건축물 : 준공 후 4년 이내 - 그 외 시설물 : 준공 후 3년 이내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제3항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정밀점검 수행방법)에 따라 정밀검사 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 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정밀점검 소홀

밀양시 #####과는 ‘@@@@@@@@@’ 등 4개 시설물에 대하여 2017. 5. 23. 실시한 정밀점검 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항목을 누락하여 외관위주의 단순 점검으로 부실 점검을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정기점검 미이행

밀양시 #####과는 밀양시 관리시설물 ‘@@@@@@ @ @@ @@’ 등 2건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부적정 안전점검 조치 소홀

아울러 밀양시 #####에서는 총괄부서로서 위와 같은 부적정 안전점검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는 등, 밀양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위의 “가”와 같이 시설물 정밀점검을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기계운영%급 ○○○, “나”와 같이 시설물 정기점검을 미이행한 실무담당자 시설&급 ○○○, “다”와 같이 부적정 안전점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시설*급 ○○○, 시설&급 ○○○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신중을 가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실무책임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 처리에 대해 실무담당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위 “가”와 같이 의무를 소홀히 한 행정&급 ○○○ 및 “나”와 같이 의무를 소홀히 한 행정\$급 ○○○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③ ‘@@@@@@@@@@@@’ 등 4개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정밀점검을 이행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시정 요구

제 목 ○○자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과)에서 추진한 ○○자원 개발사업은 2017. 8. 23. 진주시 소재 ◇◇◇◇(주)와 2,164백만원에 계약체결하고 2017. 8. 28. 착공한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4조(심의사항), 제25조(허가사항)와 동 조례 규칙 제18조(허가신청 절차 및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절성토 등 지형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 현상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1항에 지상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반시설 : 국계법 제2조(정의) 제6호 나목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행정절차 미이행

상기 사업구역은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구역 내에서 수목 식재, 절성토 등 행위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착공하여, 도 문화재 관련 부서에 2018. 3. 9.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였으나, 경남도로부터 문화재 훼손 및 주변 경관 훼손 우려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감사일 현재 토공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로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추진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업 지연 등 사업추진에 혼선이 예상된다.

또한, 상기 사업은 공원조성사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도시공원 설치

전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을 조성함이 타당하나,

사업을 발주한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하여 관련 법령에 부적합하게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전 완료되어야 함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완료 이후로 실시계획인가 추진을 계획하는 등 부적절한 사업을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현장대리인 선임계(변경)와 관련하여 배치기준에 미달된 건설기술자를 선임되어 부실시공이 우려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대리인 교체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는 등 현장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다.

다. 공사추진 부실 및 감독 소홀

사업발주시 설계내역에 분진망 및 가설방음벽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 착공전 해당 시설물을 설치완료 후 사업을 추진함에 타당하나,

소음과 비산먼지의 빈번히 발생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토공 작업(공정률 70%)에 대해 상당 부분 경과가 진행되었음에도 감사기간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등 사업추진을 부실하게 하였으며,

본 사업의 설계내역에 반영된 조경식재공의 관목 군식에 대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 4-3-2. 2(군식)에 따른 식재밀도 적용시 경제적인 조경식재가 가능함에도 군식밀도를 과도하게 설계반영하였으며,

잔디식재에 대해서는 교목, 관목이 식재된 부분과 일부 중복 계상(479m²)된 부분이 발생 되어 이를 제외함이 타당함.

또한, 토공작업에 대하여 실제 반출하지 않은 사토운반(점질토)과 설계반영된 장비(도저, 습지도저)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하여 정산이 필요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 도합 80,528천원의 공사비 감액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위와 같이 ‘○○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미이행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무담당자 &&&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경징계 조치하시기 바라며, (경징계)
- ② 실무책임자 ***와 총괄책임자 %%%에게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라며,(훈계)
- ③ 설계내역과 다르게 작업하고, 관목식재 등 과다계상된 공사비 80,528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미설치된 분진망 및 가설방음벽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하고 설치기간에 따른 손율적용(현 53%) 등을 통하여 준공전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현장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④ 소위원회의 세부시설 설치계획 검토 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미시행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행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검토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마을 하수도 개량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과)에서 발주한 **마을 하수도개량사업은 남해군 소재 ○○○○(주)와 649백만원에 계약체결하여 2018. 11. 24.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며,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창원시 소재 ○○○○(주)와 668백만원에 계약체결하여 2018. 11. 5.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수도법」 제5조 제1항에 시장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3항에는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시장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폐지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7항에 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는 제외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 발주자는 제1항의 제외규정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공공하수도 설치 부적정

공공하수도 설치시에는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 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함에도,

상기 2개 사업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없이 사업을 발주하였고 추후 변경 승인 받는 등 관련 법령에 부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관로 설치공사시 채움용 등의 골재에 대하여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사용 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제외토록 하고 있음에도, 순환 골재를 반영하지 않고 발주하였으며, 사업중이라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검토 및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설계반영시에는 약 9,590천 원의 예산절감 가능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 된다.

다. 공사감독 업무소홀

설계반영된 하수관 보호용 골재에 대하여 비경제적이며 수급이 불안정한 모래로 설계 반영 되어 있어, 이를 석분으로 변경시 약 58,467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도합 68,411천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함에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실무담당자로서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시 도 인가절치 미이행, 순환골재 미사용 등 법적 절차 누락 및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상기 사업에 순환골재 미반영, 비경제적인 하수관 보호용 골재 반영 등으로 인해 과다계상된 공사비 68,411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③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추진시 경남도 인가 미실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조속히 협의하여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권고·시정 요구

제 목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고향의강 조성사업 추진 소홀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업무개요

밀양시(\$\$\$\$과)에서 추진한 &&&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통영시 소재 (주)##### 외 2개사와 15,348백만원에 계약체결하여 2018. 12. 31. 준공예정인 사업이며,

◆◆◆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거창군 소재 %%%(주) 외 1개사와 11,134백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2018. 10. 25. 준공예정인 사업임.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으며, 하천관리청은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비관리청 하천공사 변경인가 미시행

관련 법령에 따라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인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 발생시에는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 시행하여야 함에도,

상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청의 변경인가 없이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등 사업 추진을 소홀하였음.

나. &&&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상기 사업에 반영된 보 개량공은 전체 79.2m로서 터파기를 비롯한 토공작업 후 여울 설치, 철근콘크리트 타설 등을 통하여 보를 개체 하는 것으로 설계반영되어 있으나, 해당 구간은 하천 내 자연암이 돌출되어 있는 구역으로 자연암을 파쇄하고 조경석을 설치하는 것은 시공의 어려움, 생태환경 변화 및 생태계 교란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르면 기 설치된 보의 보수 등으로도 하천기본계획 상 홍수위 등을 만족하므로, 하상지형의 최대한 유지하고 주변 생태환경을 보존 및 기존 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과 친환경적 어도 설치 등으로 대체함이 타당하며,

또한, 본 공사에 포함된 비점오염처리시설 시운전비는 별도로 시행중인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의 공사중 모니터링에 포함되어 시행중인 항목으로 중복계상됨에 따라 삭제가 필요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도합 341,510천원을 과다 반영한 사실이 있다.

다. ◆◆◆ 고향의강 조성사업 관련

본 사업에 반영된 조경석 사이목에 대하여 식재위치가 저수호안으로 홍수위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경석 사이의 뿌리내리기 어려운 생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외함이 타당하며,

본 사업과 인접하여 시행예정인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성토계획과 중첩구간(L=840m)이 발생됨에 따라 관련 사업부서 및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약 125,596천원 상당의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며,

설계변경시 홍수 여유고(H=0.71m) 부족에 따른 교통차량의 안전성 확보 등의 사유로 홍수방어벽(L=780m)을 반영한 바 있으나, 홍수방어벽 설치구간은 무제부 구간으로 방어벽 설치에 따른 방어효과가 적으며, 최대 높이 1.9m 옹벽 설치로 경관 저해, 시야확보 곤란, 도로 배수 어려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바와 같이 홍수방어벽 제외(449백만원)하고, 도로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도로 증고 등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홍수여유고 부족의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상기 2개 사업에 포함된 기존 보 구조물의 보수보강과 친환경 어도 설치, 중복 계상된 비점오염처리시설 시운전비 항목과 조경석 사이목 식재 건에 대한 공사비 379,881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시정)
- ② &&& 고향의강 조성사업에 포함된 홍수방어벽과 인접 사업과의 중복된 축제구간에 대해서는 공법 변경,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공사비 575,275천원 상당에 대하여 절감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라며,(권고)
- ③ 비관리청 하천공사 추진시 변경인가 미실시 건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과 조속히 협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시정)
- ④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 촉구하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시정요구

제 목 농어촌 보건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과)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농어촌 보건서비스 개선사업을 [표 1]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국·도비보조금 1,152백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 결과를 확정하였다.

[표 1] 농어촌 보건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연도	보조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현황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833,017	921,240	230,310	681,467
2015	• 밀양시□□□□ 개보수 • 밀양시□□□□ 의료장비구입	1.1~12.31	242,861	161,907	40,477	40,477
2016	• 하남읍·상남면□□□□□□ 시설개선 • 고정·안법보건□□□□□□ 시설개선 • □□□□□□ 의료장비 및 방역차량 • 단장·상남면□□□□□□ 의료장비	1.1~12.31	1,590,156	759,333	189,833	640,990

※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예산전용 절차 미 이행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예산 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 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밀양시(★★★★과)는 2016년 세출예산서 공공보건서비스(보건/보건 의료) 정책사업 내 보건사업관리, 감염병관리, 의약물관리, 보건진료(보건진료)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2016년 농어촌 보건서비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표 2]의 예산전용 절차 미 이행 내역과 같이 공공보건서비스(보건/보건의료) 정책사업 내 보건사업관리 단위사업에 계상된 세출예산을 예산의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건진료 단위사업의 고정□□□□ 와 안법 □□□□ 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명목으로 무단 사용하고 보건진료 단위사업에 계상된 세출예산을 하남읍 ■■■■■ 시설개선 사업의 명목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

[표 2] 예산 전용절차 미 이행 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전용절차 미이행 현황		비고
					사 업 명	사용금액	
공공보건 사업	보건사업 관리	소계		1,392,178		14,404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상남면■■■■■ 이전신축	1,185,106	•고정보건■■■■■ 난방전열관	4,094	
			하남읍■■■■■ 시설개선	207,072	•고정보건■■■■■ 롤스크린 •안법보건■■■■■ 환경정비공사	3,730 6,580	
	보건진료	소계		130,178		1,436	
		보건■■■■■ 시설현대화	고정보건■■■■■ 시설개선	71,454	•하남읍■■■■■ 시설개선	1,436	
			안법보건■■■■■ 시설개선	58,724			

※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보조금법」 제23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경상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 사업 변경 포함)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안내에 따르면 당초 신청한 장비구매 후 **예산절감액**으로 심사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야 하며, 당초 신청한 장비 구매 후 **예산절감액**으로 재량장비를 추가구매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 절감 등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와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사용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밀양시(★★★★과)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농어촌 보건서비스 개선 사업인 보건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보조금법에 따라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와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사용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 보건의료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도 [표 3]과 같이 2015년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디클라인, 발마사지기, 벨트마사지기, 바코드 프린터 등을 추가 구입하였고 더구나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 장비구입과 무관한 하남면 □□□□, 산내면 □□□□, 단장면 □□□□에 사용할 보건의료장비를 부당하게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또한 2016년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혈압계도 부당하게 추가 구입하였다.

또한, 2016년 농어촌 보건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신청한 장비구매 후 추가 심사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야 하는데도 2016. 3. 15. 밀양시 □□□ 재활치료실 종합작업치료세트를 우선 구매하고 2016. 4. 22. 사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는 등 의료장비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 보건의료장비 부적정 구매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보조사업 내용(사업계획)	보건의료장비 부적정(추가) 구매현황		
		사용처	장비명	구입금액
계				11,970
2015	밀양시□□□ 자동화학 검사기	□□□	디클라인	940
		□□□(2개) 하남□□□□(2개) 산내□□□□(1개)	발마사지기 5개	2,050
		단장□□□□	벨트마사지기	410
		□□□	바코드프린터	770
2016	밀양시□□□ 장비 및 방역차량 단장·상남면□□□□ 의료장비	□□□	작업치료세트	5,600
			자동혈압계	2,200

※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4. 거짓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농어촌 보건서비스 개선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건의료장비 구매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2개월 내에 완료보고서 및 구매한 장비의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시·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밀양시(★★★★과)는 2016. 3. 15. 밀양시 ○○○○ 재활치료실 종합작업 치료세트를 구매한 후 2016. 4. 22. 보건복지부의 사후승인을 득하였는데도 2016. 8. 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보건의료장비 구매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성립된 공문서인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와 다르게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구매한 것처럼 계약일자를 2016. 3. 8.에서 2016. 7. 29.로 물품납품·검수 일자를 2016. 3.14.에서 2016. 8. 4.로 지출부와 지급명령발행부 기재일자를 2016. 3.15.에서 2016. 8. 4.로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경상남도에 보건의료장비 구매 완료보고 하는 등 위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농어촌 보건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따르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사업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밀양시는 2015년 농어촌 보건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4]와 같이 장관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밀양시 ○○○○ 시설 개선사업과 무관한 하남읍과 산외면 ■■■■■ 실시설계용역비 및 민원용 선풍기 구입으로 보조사업의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2016년 농어촌 보건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4]와 같이 장관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하남, 상남)와 보건■■■■ (고정, 안법) 시설 개선사업과 무관한 밀양시■■■■ 관련 개보수사업과 범도 보건■■■■ 자동차 보수 사업비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집행하는 등 총 19,332천원 상당을 국도비 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표 4] 국도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연도	보조사업내용	목적외 사용현황				
		사용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2,607	15,458	3,874	13,275
2015	밀양시□□□□ 시설개선	하남읍·□□□면 □□□□□ 실시설계용역비	1,552	1,034	259	259
	밀양시□□□□ 자동화학검사기	민원용 선풍기	59	29	15	15
2016	하남읍·상남면 □□□□□ 시설개선	밀양시□□□□ 시설개선 (살수헤드, 방화샷다 쪽문, 승강 기 방화문)	12,540	5,782	1,446	5,312
		산내·산외□□□□□ 및 차월 보건□□□□ LED조명 설치	17,476	8,058	2,015	7,403
	고정·안법보건 □□□□□ 시설개선	범도보건□□□□□ 자동문 보수	980	555	139	286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2013. 1. 7.~ 2017. 6. 30.까지 농어촌 보건서비스 개선사업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전 실무담당자 지방의료기술 6급 △△△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경징계** 조치 요구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보건행정과 전 실무책임자 행정5급 ▲▲▲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징계, 훈계**)
- ② 2015년~2016년 농어촌 보건서비스 개선사업 중 목적 외로 사용한 국도비 보조금 19,332천원을 **회수** 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밀양여름○○○○예술축제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밀양시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공연 예술 작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 ◇◇연극촌”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밀양여름○○○○예술축제”를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제15회 밀양여름 ○○○○축제	총 50개 작품 공연 등	606,000	-	170,000	300,000	136,000	2015. 3. 1. ~ 11. 11.	
제16회 밀양여름 ○○○○축제	총 53개 작품 공연 등	700,000	100,000	150,000	300,000	150,000	2016. 4. 1. ~ 12. 21.	
제17회 밀양여름 ○○○○축제	총 52개 작품 공연 등	800,000	200,000	150,000	300,000	150,000	2017. 3. 1. ~ 9. 15.	

※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자부담 확보없이 보조금 교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5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확인과 보조사업자의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지방보조금

의 교부결정(교부)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밀양시(★★★★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밀양○○○○예술축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교부)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은 확보하지 않고 “수익 발생분을 자부담으로 사용한다”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는데도 자부담 확보 관련 증빙자료 징구 등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 없이 보조금을 교부결정(교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보조사업은 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적용할 대상이 아닌데도 보조사업 시행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사용한다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

3. 수익금 관련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 부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제21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며,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하며, 정산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 등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밀양시(★★★★과)는 위 보조사업을 통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명시하고,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외의 부분에 수익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수익금, 자부담 등 재원별로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배분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여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부당하게 보조사업자의 수익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나. 위법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밀양시(★★★★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계획서를 통해 수익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수익금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나 자부담 확보는 하지 않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익금은 자부담으로 한도로 임의로 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금이 아닌 자부담 사용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더구나 수익금 사용용도에 대한 교부조건도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밀양○○○○예술축제” 보조금 교부조건 제7호에 따라 수익발생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로 반환토록 되어 있어 최소한 수익금의 일부는 시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보조금 교부조건 제14호에는 “입장권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보조사업의 자부담으로 사용한다.”는 교부조건 부여로 위 보조금 교부조건 7호와 상충되게 설정하여 수익금의 일부가 반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보조금 교부조건 제14호에서 “수익금이 자부담으로 정한 비용보다 초과시 다음연도 사업의 자부담으로 사용한다.”라고 부여하여,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 등 반환”해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정면 배치되는 교부조건을 부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표 2]와 같이 2016년 미집행 수익금 집행잔액 3,718천원이 발생하였는데도 반환받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부적정하게 정산 확정하는 등 수익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수익금 이월 내역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실자부담	수익금	이월액	
계	2,106,000	300,000	470,000	900,000	436,000	31,994	400,288	3,718	
제15회 밀양여름 ○○○○축제	606,000	-	170,000	300,000	136,000	11,480	124,520	-	
제16회 밀양여름 ○○○○축제	700,000	100,000	150,000	300,000	150,000	3,000	147,000 (150,718)	-	
제17회 밀양여름 ○○○○축제	800,000	200,000	150,000	300,000	150,000	17,514	128,768	3,718	

※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4. 보조사업 회계처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및 밀양○○○○예술축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밀양시 지방보조금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밀양시(★★★★과)는 보조사업자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용역 대행사업자 선정시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표 3] 과 같이 1인 견적을 받아 총 6건 186,000천원에 대해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조금 회수나 지원중단 등의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 확정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 수익계약 내역

연도	사용내역	계약금액(천원)	계약자(대행사업자)	비고
계		186,000		
2015년	조명장비 임차	25,000	●●●(▲▲조명)	
	음향장비 임차	26,000	◆◆◆(☺☺미디어)	
	조명장비 임차	30,000	ㄹㄹㄹ(☺☺에스)	
2016년	관람석 임차	30,000	↕↕↕(☺☺☺여니)	
	음향장비 임차	40,000	◆◆◆(☺☺미디어)	
2017년	음향장비 임차	35,000	◆◆◆(☺☺미디어)	

※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책임자 행정6급 △△△, ★★★★★과 전 실무책임자 행정6급▲▲▲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람 (훈계),
- ② 향후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맞게 교부조건을 부여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수익금이 타용도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밀양시 ○○○ ○○의 집 운영 소홀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2001년 2월부터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 개발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와 공간 제공을 위해 밀양시 ○○○ ○○의 집을 민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 ○○의 집 운영현황

구분	주소	운영주체	종사자	사업비	주요사업
밀양시 ○○○ ○○의 집	밀양시 ◆◆로	재)◆◆◆◆ ◆◆회	4명	145백만원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정보문화예술활동 정보제공 청소년 교양강좌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침 위반(운영대표자 상근근무 위반)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 ○○의 집 운영 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 종사자는 시설 업무에 전념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나. 보조금 교부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6조 및 제19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7. 9.25. 시행)」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심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위반(운영대표자 상근근무 위반)

밀양시 ○○○ ○○의 집 관장을 맡고 있는 ○○○○에 대해 감사기간 동안 상근근무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15년 ~ 2017년 「밀양시 ○○○ ○○의 집 운영규정」상 관장 복무규정이 ‘비상근’으로 명시 되어있고, 아래 [표1] 과 같이 ○○○○이 청소년 ○○○ ○○의 집 관장과 ♡♡♡어린이집 대표·운전기사를 겸직해서 근무한 사항과 관장 비상근을 인정한 밀양시 답변서 등을 종합한 결과, ○○○○은 밀양시 ○○○ ○○의 집에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도 밀양시 ★★★★★과에서는 ○○○○이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과 위반되게 밀양시 ○○○ ○○의 집에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지만, 2018년 2월 말 밀양시와 (재)◇◇◇◇ 장학회 간 체결한 「밀양시 ○○○ ○○의 집 위수탁 계약」시 까지 비상근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해 2015. 1월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비상근한 밀양시○○○ ○○의 집 관장에게 ○○수당 36,900천원이 지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표 1] 겸직 근무 내역 (단위:천원)

시설명(직위)	활동기간	○○수당 등 지급	재원
밀양시○○○ ○○원(관장)	소계	36,900	보조금
	2015. 1~2015.12	12,000	
	2016. 1~2016.12.	10,900	
	2017. 1~2017.12.	12,000	
	2018. 1~2018. 2.	2,000	
♡♡♡어린이집 (대표·기사)	소계	14,000	민간
	2017. 1 ~2017.12.	12,000	
	2018. 1 ~2018. 2	2,000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보조금 교부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7. 9.25. 시행)」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심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밀양시 ○○○ ○○의 집이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과 위배되게 운영대표자 비상근 근무로 ○○수당을 계상한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밀양시에 매년 제출하였으나, 밀양시 ★★★★★과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 [표 1]과 같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밀양시 ★★★★★과에서는 밀양시 ○○○ ○○의 집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 ○○의 집 업무와 연관이 없고 지급근거가 없는 ■■청소년수련시설 협회비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 보조금 교부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적정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50천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보조금 부당 지급내역

연도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급액(원)
계		4건	450,000
2015	일반운영비	■■■청소년수련시설협회비	100,000
2016	일반운영비	■■■청소년수련시설협회비	100,000
2017	일반운영비	■■■청소년수련시설협회비	200,000
2018	일반운영비	■■■청소년지도사 협회	50,000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밀양시 ○○○ ○○의 집 」 운영과 감독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보 ▲▲▲, 지방사회복지주사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기 바랍니다.(훈계)
-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과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교육 실시하시고, 종사자 상근근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기를 밀양시 ○○○ ○○의 집에 설치하시고, 부당하게 지급한 ■■청소년수련시설 협회비 등 450천원을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무안맛나향 ○○축제 및 얼음골 ○○축제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 ■■■■■■■■(★★★★★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밀양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향상 등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표]와 같이 ‘무안맛나향○○축제 및 얼음골○○축제’ 행사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보조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사업비				교부일	정산일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210,021	11,000	88,000	111,021		
2015 무안맛나향○○축제	2015.4.17. ~ 4.19.	무안맛나향 ○○○○회	39,000	4,000	15,000	20,000	‘15.4.2.	‘15.5.26.
2016 무안맛나향○○축제	2016.12.9.~12.10.		40,021	-	15,000	25,021	‘16.12.6.	‘17.1.12.
2017 무안맛나향○○축제	2017.4.14.~4.16.		31,000	-	15,000	16,000	‘17.3.31.	‘17.6.5.
2015 얼음골○○축제	2015.11.7.~11.8.	얼음골사과 ○○○○회	40,000	7,000	13,000	20,000	‘15.10.15.	‘15.12.3.
2016 얼음골○○축제	2016.11.5.~11.6.		30,000	-	15,000	15,000	‘16.10.21.	‘16.12.23.
2017 얼음골○○축제	2017.11.11.~11.12.		30,000	-	15,000	15,000	‘17.11.1.	‘17.12.11.

※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고 되어있고,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에는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2017년 무안맞나향○○축제, 얼음골○○축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8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 제2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와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밀양시 ■■■■■■■■(★★★★★과)에서는 법령, 조례, 시장의 처분 등을 위반하여 매년 축제행사로 인해 발생한 협찬금 등 수익금을 시장의 사업내용 변경 승인 없이 임의 집행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금 반환조치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보조사업자의 수익금 관리 등 회계처리 부적정

그런데도 밀양시 ■■■■■■■■(★★★★★과)에서는 무안맛나향○○축제, 얼음골○○축제의 경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협찬금 등 수익금이 발생하며 보조사업자가 행사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부신청 시 수익금 사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보조금 교부 시 축제행사로 인해 발생될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부가하여 교부 통지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가 [표 1]과 같이 시장에게 보조사업 내용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자발적 협찬금 등 수익금 174,690천원 전액을 지출 증빙서류 없이 행사비로 추가 집행하였다고 하여 사용용도를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지출용도와 집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2018. 6. 18. ~ 6. 29.) 동안 실제 집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감사자를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표 1] 축제 협찬금 등 수익금 발생 및 임의 집행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협찬금 발생금액(천원)	임의 집행금액(천원)	사용용도(추정)
계		174,690	174,690	
2015 무안맛나향○○축제	2015. 4.17. ~ 4.19.	35,200	35,200	행사비
2016 무안맛나향○○축제	2016.12. 9.~12.10.	8,000	8,000	행사비
2017 무안맛나향○○축제	2017. 4.14.~ 4.16.	41,300	41,300	행사비
2015 얼음골○○축제	2015.11. 7.~11. 8.	28,320	28,320	행사비
2016 얼음골○○축제	2016.11. 5.~11. 6.	21,810	21,810	행사비
2017 얼음골○○축제	2017.11.11.~11.12.	40,060	40,060	행사비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밀양시 ■■■■■■(★★★★★과)에서 보조사업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익금을 어떠한 용도로 집행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교부 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익금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나. 행사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밀양시 ■■■■■■(★★★★★과)에서는 맛나향○○축제 및 얼음골○○축제 행사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가 위 [표 1]과 같이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수익금을 임의로 집행하였으며, 아래 [표 2]와 같이 보조 사업기간 종료 후에 식사비로 집행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보조금 용도 외 사용(사업기간종료 후 사업비 집행)

사업명	사업기간	사용일자	집행금액(천원)	사용내역	비고
계			30,520		
2016 무안맛나향 ○○축제	‘16.12.9.~12.10.	‘16.12.12.	39	식사비	체크카드
		‘16.12.15.	381	재료비	외상 거래 후 체크카드 결제
		‘16.12.15.	100	재료비	
2017 얼음골 ○○축제	‘17.11.11.~11.12.	‘17.11.27.	18,820	△△구입	외상 거래 후 체크카드 결제
		‘17.11.23.	8,000	초청장 제작 등	
		‘17.11.24.	3,180	행사경품 구입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다.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밀양시 ■■■■■■(★★★★★과)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¹⁰⁾를 제외하고는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사용이 원칙이라고 부가하였지만, 보조사업자가 [표 3]과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정산 완료한 사실이 있다.

10)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표 3] 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미사용 현황

사업명	지출일자	집행금액(천원)	사용내역	비고
계		84,416		
2015 무안맛나향○○축제	'15. 4.22.	8,200	시식, 행사용 ●●●구입	계좌이체
2016 무안맛나향○○축제	'16.12.26.	18,800	재료비	계좌이체
	'16.12.16.	918	재료비	계좌이체
2017 무안맛나향○○축제	'17. 4.27.	9,500	행사용 ●●●구입	계좌이체
2015 얼음골○○축제	'15.11. 9.	6,000	이동식 화장실 임차	계좌이체
	'15.11.27.	16,000	시식, 경품용 △△구입	계좌이체
2016 얼음골○○축제	'16.11. 4.	13,500	△△구입	계좌이체
	'16.11. 8.	3,000	경품구입	계좌이체
	'16.11. 8.	7,105	인쇄물 외	계좌이체
	'16.11.10.	1,393	팜플렛	계좌이체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기념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지만 ‘2016년 밀양얼음골 ○○축제’ 행사 시 참여 우수농가 시상금, 노래자랑 경품 등을 상품권(☆☆☆☆ 상품권 10만원권 22장, 5만원권 1장, 1만원권 1장 등 총2,260천원)으로 지급하면서 시상내역, 수불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지급대상자를 알 수 없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도 알 수 없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정산·확정하는 등 정산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이면서 실무담당자인 ★★★★★과 행정6급 △△△, 실무담당자인 ★★★★★과 농업7급 △△△과 전 실무담당자 행정7급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2016년 무안맛나향○○축제 용도 외 사용 건 (식사비 1건) 39천원 상당액을 회수 조치하시고, (시정)
- ③ 밀양시 ○○○○○○○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축제 수익금(174,690천원)을 임의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실제 지출여부와 집행용도에 대해 “자체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 교부 조건 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 ■■■■■■■■(★★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 ■■■■■■■■(★★과)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표]와 같이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선정 연도	대상자(후계농)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용자금액	확인서 발급일
	성명	주소				
	10명				1,134,518	
2015	■■■	하남읍 00000길 9-3	하우스구입(9동, 9,120㎡)	하남읍 00리 2315 외 3필지	200,000	‘16. 6.16.
2015	■■■	상동면 000길 90-23	하우스설치(12동, 6,720㎡)	상동면 00리 1050-1 외 3필지	100,000	‘15. 6. 4.
2015	■■■	상남면 00로 48	하우스구입(12동, 13,200㎡) 하우스설치(5동, 4,275㎡)	상남면 00리 1458 외 3필지	76,000	‘16. 7.20. ‘15. 8.18.
2015	■■■	상남면 00로 414-1	하우스설치(4동, 2,688㎡)	상남면 00리 1753	96,227	‘15. 8.27.
2015	■■■	미리벌00로 35	하우스설치(2동, 2,880㎡)	상남면 00리 723-3	85,471	‘15.10.15.
2017	■■■	하남읍 0000길 123-3	하우스신축(5동, 1,542.5㎡)	하남읍 00리 2337	75,820	‘17. 7.21. ‘17. 8.16.
2017	■■■	하남읍 00로 92-19	하우스 및 육묘장설치(9동)	하남읍 00리 112-5 외 1필지	120,000	‘17.11. 3.
2017	■■■	00로 234-13, 202-1111	시설하우스구입(3동, 6,043㎡)	산외면 00리 267 외 2필지	200,000	‘17. 5. 4.
2017	■■■	상남면 0000길7	시설하우스구입(3동, 3,028㎡)	상남면 00리 347-5	120,000	‘17. 4.12.
2017	■■■	상남면 00로 1187-15	시설하우스설치(6동)	상남면 00리 611-12 외 1필지	61,000	‘17.12.24.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10조,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농지, 상속농지 등을 제외하고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판결)」에 따르면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용자 대상에서 제외하며,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용자지원 연도부터 용자금 상환일까지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 확인, 용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확인한 때에는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식품사업자금(용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을 위해 임차농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10년) 이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밀양시 ■■■■■■■■(★★과)에서는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받은 후계농에게 용자금 회수 조치 등을 하여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발급 부적정

밀양시 ■■■■■(★★과)에서는 위 [표]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 1]과 같이 농지법에 따라 농지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임대차계약 체결한 농지(■■■ 등 7명 11필지)에 시설하우스를 구입 및 설치 완료 건과 [표 2]와 같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시설하우스를 구입 완료한 건(. . . 1건, 금융거래 내역 확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밀양시에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밀양시에서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시설하우스 구입 및 설치비용 718,291천원을 용자 실행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

[표 1] 시설하우스 구입(설치) 불법임대차 농지 현황

후계농 (임차인)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변동일	계약기간	용자금액(천원)	확인서 발급일
계	11개 필지						718,291	
■■■	상동면 00리 1050-1	답	1,881	△△△	‘09.10.20.(매매)	2015.6.1.~ 2020.5.31.	100,000	‘15. 6. 4.
	상동면 00리 1050-2	답	1,388		‘09.10.20.(매매)	2015.6.1.~ 2020.5.31.		
	상동면 00리 1050-3	답	1,164		‘09.08.25.(매매)	2015.6.1.~ 2020.5.31.		
	상동면 00리 1050-4	답	2,707		‘09.08.25.(매매)	2015.6.1.~ 2020.5.31.		
■■■■■	상남면 00리 1458	답	8,921.1	㉠㉠㉠	‘14.09.25.(증여)	2016.6.1.~ 2026.6.1.	44,000	‘16. 7.20.
	상남면 00리 148-5	답	1,665	㉡㉡㉡	‘10.12.27.(증여)	2015.7.28.~ 2025.7.28.	32,000	‘15. 8.18.
■■■■■	상남면 00리 723-3	답	3,729	㉢㉢㉢	‘98.06.27.(매매)	2013.2.~ 2022.2.	85,471	‘15.10.15.
■■■■■	하남읍 00리 2337	답	3,963.9	㉣㉣㉣	‘97.05.07.(매매)	2015.3.1.~ 2045.2.28.	75,820	‘17. 7.21. ‘17. 8.16.
■■■	산외면 00리 269	답	400	㉤㉤㉤	‘96.06.30.(매매)	2017.12.29.~ 2027.12.28.	200,000	‘17. 5. 4.
□□□	상남면 00리 347-5	답	3,028	㉥㉥㉥	‘97.02.01.(매매)	2017.3.1.~ 2026.2.28.	120,000	‘17. 4.12.
■■■	상남면 00리 208-2	답	2,682	㉦㉦㉦	‘97.04.04.(매매)	2017.12.14.~ 2037.12.14.	61,000	‘17.12.14.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사업추진 현황

후계농	농지소재지	사업내용	시설하우스 소유자	구입비용	실제구입일 (매매계약일)	후계농 선정연도	확인서 발급일
■ ■ ■	산외면 00리 267 외 2필지	시설하우스 구입 (3동 6,043㎡)	●●●	2억원	2016.8.1. (2017.4.8.)	2017	'17.5.4.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후계농업경영인 사후관리 소홀

「후계농업경영인지원사업 시행지침」에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농지 및 시설 매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표 3]과 같이 밀양시 ■■■■■■■■(★★과)에서는 이번 감사 기간(2018. 6. 18. ~ 2018. 6. 29.) 까지 후계농 자금으로 구입·설치한 시설하우스를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에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지소유자가 해당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증명되어 쌀직불금이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가 부당하게 수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임대차 농지에 대한 근저당 및 지상권·전세권 설정을 방치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과 토지소유자(△△△)와의 임대차 농지인 상동면 00리 1050-1 외 2필지(임대차 기간 : '15.6.1.~'20.5.31.)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지인(◆◆◆, ◡◡◡)과 이중계약체결('18.1.1.~'21.1.31.)을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밀양시 밀양시 ■■■■■■■■(★★과)는 농식품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시설하우스)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시설하우스 설치 임대차 농지 사후관리 현황

후계농 (임차인)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농업경영체등록	지적사항
■■■	하남읍 00리 2315	답	2,646.6	ㄸㄸㄸ	◆◆◆	후계농 경영정보 미등록
	하남읍 00리 2316	답	3,920.5		◆◆◆	후계농 경영정보 미등록 근저당(99.9.15.)
	하남읍 00리 2317	답	2,977.5	◎◎◎	◆◆◆	후계농 경영정보 미등록
	하남읍 00리 2318	답	1,926.9		ㄸㄸㄸ	후계농 경영정보 미등록
■■■	상동면 00리 1050-1	답	1,881	△△△	◆◆◆	이중계약 (18.1.1.~21.1.31.)
	상동면 00리 1050-2	답	1,388		◡◡◡	이중계약 (18.1.1.~21.1.31.)
	상동면 00리 1050-3	답	1,164		◡◡◡	이중계약 (18.1.1.~21.1.31.)
	상동면 00리 1050-4	답	2,707		△△△	후계농 경영정보 미등록

후계농 (임차인)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농업경영체등록	지적사항
■■■■■	상남면 00리 1458	답	8,921.1	▽▽▽	▽▽▽	후계농 경영정보 마등록 근저당(18.5.21.)
	상남면 00리 156	답	1,832	■ ■ ■	■ ■ ■	후계농 경영정보 마등록
	상남면 00리 156-1	답	1,434	○○○	■ ■ ■	후계농 경영정보 마등록
	상남면 00리 148-5	답	1,665		■ ■ ■	후계농 경영정보 마등록
■■■■■	상남면 00리 1753	답	3,436	◆ ◆ ◆	◆ ◆ ◆	후계농 경영정보 마등록 근저당(16.7.27.)
■■■■■	상남면 00리 723-3	답	3,729	⊗ ⊗ ⊗	■■■■■(본인)	농지법 위반
■■■■■	하남읍 00리 2337	답	3,963.9	□ □ □	■■■■■(본인)	농지법 위반
■■■■■	하남읍 00리 112-5	답	2,725	⊗ ⊗ ⊗	⊗ ⊗ ⊗	후계농 경영정보 마등록
	하남읍 00리 114-1	답	3,002	⊗ ⊗ ⊗	⊗ ⊗ ⊗	후계농 경영정보 마등록 근저당(13.9.5.)
■■■■■	산외면 00리 267	답	2,965	◇ ◇ ◇	■■■■■(본인)	후계농 선정 이전 사업추진
	산외면 00리 268	답	2,678			
	산외면 00리 269	답	400			농지법 위반
□ □ □	상남면 00리 347-5	답	3,028	● ● ●	● ● ●	후계농 경영정보 마등록
■■■■■	상남면 00리 208-2	답	2,682	● ● ●	■■■■■(본인)	농지법 위반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여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농업8급 ○○○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후계농 선정일 이전에 사업을 추진한 후계농 (■■■■)의 시설하우스 구입 융자금 2억원 상당액(이차보전금 포함)을 상환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지 등 조치하고,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임대차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재정지원건의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시(★★과)

조 치 기 관 밀양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밀양시(★★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표]와 같이 도비 보조금 재정지원건의사업 명목으로 경상남도로부터 도비 보조금 1,150백만 원을 교부받아 ●● 농로정비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재정지원 건의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연도	보조 사업명	교부결정 통지일자	사업기간	사업비 현황		
				계	도비	시비
계	11개 사업			1,290,000	1,150,000	140,000
2015	●● 농로정비	15.10.29.	15.10.~12.	120,000	120,000	
	△△ 농로정비	15.10.29.	15.10.~12.	50,000	50,000	
	㉠㉠ 용배수로 정비	15. 6.15.	15. 7.~12.	250,000	110,000	140,000
	㉡㉡ 배수로 정비	15. 6.15.	15. 7.~12.	60,000	60,000	
	㉢㉢ 용배수로 정비	15. 6.15.	15. 7.~12.	60,000	60,000	
2016	△△ 섬들 농로정비	16. 8.29.	16. 9.~12.	100,000	100,000	
	㉣㉣ 농업용수 개발	16.12.23.	16.12.~17.10.	100,000	100,000	
	㉤㉤ 농업용수 개발	16.12.23.	16.12.~17.10.	100,000	100,000	
2017	●● 배수로 정비	17. 6.27.	17. 6.~12.	100,000	100,000	
	㉦㉦ 용배수로 정비	17. 6.27.	17. 6.~12.	50,000	50,000	
	□□들 농로 확포장	17. 6.27.	17. 6.~12.	300,000	300,000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밀양시(★★과)에서는 2015년 재정지원 건의사업인 ◆◆ 및 △△ 농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이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기간 변경 등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및 사업비 이월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비를 이월하여 2016. 12월까지 위 보조사업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7년 재정지원 건의사업인 □□들 농로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이 2017. 6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기간 변경 등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및 사업비 이월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비를 이월하여 2018년 2월 7일까지 위 보조사업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3. 사업비 초과 집행 등 목적 외 사용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8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밀양시(★★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건의사업인 ㉠㉠ 농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당해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에 맞게 지출하고 사업비 초과 등이 예상 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표 1]과 같이 ㉠㉠ 농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당해 사업비를 초과 집행하였으며, 또한 재정건의사업의 보조금 교부목적과 무관한 ㉡㉡용배수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집행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 사업내용과 다르게 사용하였다.

[표 1] 사업비 초과집행 등 목적 외 사용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연도	보조 사업명	사업비 현황			초과집행 등 목적외사용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계	13건	728,967	578,345	150,622	49,598	41,762	7,836
2015	㉠㉠ 농로정비	50,000	50,000		8,432	8,432	
	㉡㉡ 용배수로 정비	250,000	110,000	140,000	3,448	1,517	1,931
	㉡㉡ 용배수로 정비 외 5개소 설계용역비	18,967	8,345	10,622	10,544	4,639	5,905
	㉢㉢ 용배수로 정비	60,000	60,000		6,242	6,242	
2016	㉠㉠ 섬들 농로정비	100,000	100,000		6,878	6,878	
	㉣㉣ 농업용수 개발	100,000	100,000		7,761	7,761	
2017	㉤㉤ 배수로 정비	100,000	100,000		1,993	1,993	
	㉥㉥ 용배수로 정비	50,000	50,000		4,300	4,300	

※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2015년 실시설계용역비 중 ㉡㉡ 용배수로 정비공사만 목적에 부합함.

4. 도비 보조금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등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조사업의 실적 등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밀양시(★★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건의사업인 ㉠㉠ 농로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2]와 같이 ㉠㉠ 농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당해 보조사업별·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자별 내지는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세부사업 내 시설비 통계목에 보조사업을 일괄로 묶어 교차사용하는 등 일괄 정산으로 인해 당해 보조사업을 실제 집행잔액과 다르게 경상남도에 정산보고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 받는 등 도비 보조금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7년 재정건의사업인 □□들 농로 확포장 사업비 300,000천원 중 292,764천원을 집행하고 2018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는데도 집행잔액(도비 보조금) 7,236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보조금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보조 사업명	교부결정 통지일자	사업비			정산보고			실제 집행액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10개 사업		990,000	850,000	140,000	985,988	849,977	136,211	991,134	849,203	141,931
●●● 농로정비	15.10.29.	120,000	120,000		169,777	169,977		111,545	111,545	
㉠㉠ 농로정비		50,000	50,000					58,432	58,432	
㉡㉡ 용배수로	15. 6.15.	250,000	110,000	140,000	246,211	110,000	136,211	253,448	111,517	141,931
㉢㉢ 배수로		60,000	60,000		60,000	60,000		46,521	46,521	
㉣㉣ 용배수로		60,000	60,000		60,000	60,000		66,242	66,242	
㉤㉤ 섬들 농로	16. 8.29.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6,878	106,878	
㉥㉥ 농업용수	16.12.23.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7,761	107,761	
㉦㉦ 농업용수		100,000	100,000		100,000	100,000		84,014	84,014	
㉧㉧ 배수로	17. 6.27.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1,993	101,993	
㉨㉨ 용배수로		50,000	50,000		50,000	50,000		54,300	54,300	

※자료 : 밀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 ①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처리한 ★★과 전 실무담당자 시설6급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지방재정법」 제32조8에 따라 ◎◎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5개소 설계용역비로 목적 외 사용한 도비 보조금 4,639천원 및 발생이자 상당액을 회수 조치 하고 ◆◆농로정비, □□배수로, ●●농업용수 공사 집행잔액 37,920천원과 □□들 농로 확포장 공사 집행잔액 7,236천원 등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총45,156천원 및 발생이자 상당액을 반납 조치 하고, 앞으로 위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